

2020년도 국정감사 요 구 자 료

2020. 10



대통령비서실

목 차

• 강은미 의원

1.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
2.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내용과 추진경과(2019~2020)	9
3.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계획' 추진 결과	30
4.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결과	32
5. 연구용역 현황	33
6.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관련 규정	34
7. 최근 5년간 청와대 예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34
10. 청와대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4
8. 국가 안보실을 포함한 청와대 여론조사 현황 및 연구용역보고서	48
9. 청와대 및 각 정부부처 설문조사 발주 현황	48
11.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및 답변 주요 내용	49
12.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안건 및 결과 보고서	60

• 곽상도 의원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63
2. 최근 3년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감사결과보고서	63

3.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감사결과 보고서	64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65
5.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 및 비위자 현황, 징계 관련 위원회 소집내역 및 상세 처리결과	65
6.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자녀, 친인척 등 채용 및 근무 현황	66
7.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재취업 비율	66
8. 최근 3년간 연도별 발행간행물 목록	66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수의계약 건수 및 비율	67
10.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	68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	68
12.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국외 출장 및 국외 여비 지급 내역	69
13.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카드 사용내역	69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70
15.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역 및 사유	70
16. 2017년~2018년 사업별 간단설명자료	71
17.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71
18.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실적 ..	72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	72

• **김성원 의원**

1-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 포함) 75

1-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 인건비 판공비 전용현황 76

1-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77

1-4.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77

1-5-1. 임직원 법인카드 지급현황 78

1-5-2.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및 사용현황(일시·장소·금액·목적) 78

1-5-3. 임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현황(사후조치 현황 포함) 78

1-5-4.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 78

1-6.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손비처리내역과 불납결손액 79

2-1. 임직원 정원/현원 현황 79

2-2. 임직원 정규직/계약직 현황 80

2-3. 임직원 고졸/대졸 등 학력별 현황 81

2-4. 임직원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81

2-5. 임직원 직급별 이직 현황(평균 재직기간 기재 要) 82

2-6. 국가유공자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벌금납부 현황 등) 85

2-7. 장애인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장애인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
(벌금납부 현황 등) 85

2-8.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청년의무고용제도에 의한 청년고용 및 준수
현황 85

2-9-1. 직급별 퇴직인원 86

2-9-2. 퇴직 후 재취업 현황	86
2-9-3.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 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	86
2-9-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심사결정자료	86
2-10-1 임직원 직급별 평균임금 현황	89
2-10-2. 임직원 직급별 성과급 현황	90
2-10-3. 임직원 개인별 판공비 지급액 및 사용내역	90
2-10-4.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선물	90
2-11. 공채, 특채 등 각종 채용현황(채용유형별 분류 要)	91
2-12.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 경력, 위촉(임명) 일자 및 근거법(령)	91
2-13.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의 구성 근거법,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조직구성원의 대표 경력 및 위촉 일자	96
2-14.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현황	96
2-15-1. 채용당시 연도, 임기, 부서명, 직급, 담당업무, 주요경력, 공무원 퇴직자일 경우 퇴직연월 및 소속 부처명 기재	97
2-15-2. 현재 개방형직위 현황(부서명, 직급, 담당업무, 직급공모절차, 채용방법, 담당업무	97
3-1. 기관 내 부정 또는 부적절 비위행위에 대해 적발하거나 감사원을 비롯한 상부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	97
3-2.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현황 및 신고서 사본	97

3-3. 3-2와 관련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직원 현황(일시, 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징계나 주의조치 사유, 징계 등의 내용) ……	97
3-4.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	98
3-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	98
3-6.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	99
3-7-1. 기관장의 국외출장 내역 ……	99
3-7-2. 임직원 국외출장 내역 ……	99
3-8-1. 임직원 교육훈련 현황 상세내역 ……	100
3-8-2. 임직원의 교육훈련비 환수현황 상세내역 ……	100
3-8-3. 임직원 해외연수 및 교육훈련 현황 ……	100
3-9-1. 직장 내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 발생현황 ……	100
3-9-2. 직장 내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한 직장내 이의제기, 고소고발 등 각종 소송제기 현황 ……	100
3-9-3.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현황 ……	101
3-10. 임직원 외부 영리 활동 현황 ……	101
3-1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	102
4-1. 내·외부 감사자료 ……	102
4-2-1. 기관의 명의 계약 현황 및 해약여부 현황과 해약으로 인한 보상·배상 현황 ……	104
4-2-2. 전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	105
4-2-3 수의계약 체결현황 ……	106

4-3. 연구용역 발주현황	107
4-4-1. 사업별 사업설명서	108
4-4-2.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09
4-4-3. 사업추진 실적현황	109
4-4-4. 사업별 정부, 감사원,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110
4-4-5. 현재 시행중인 성과평가 지표 및 해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결과	112
4-5. 전산장애, 해킹 등의 피해발생 현황	113
4-6. 법률자문 용역 내역 및 용역결과보고서	113
4-7. 스포츠 회원권 보유 및 지급현황	114
4-8. 차량소유 및 운행현황	114
4-9. 체육대회 등 기관 내 각종 직원행사 추진현황	115
4-10.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	115
4-11.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115
4-12. 기관장 주재 기자간담회 현황	116
4-13.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타부처와의 MOU 및 협력내용	116
4-14.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수발신공문 목록	116
4-15.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안전진단 현황	117
4-16.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과 그 결과	117

4-17.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18
4-18.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및 정보화 수준 평가, 설문조사, 각종 모니터링 결과	118
5.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특활비,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현황	119
6. 2020년 정부예산안 내 특활비, 업무추진비 편성 요청 현황	120
7.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도별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 통보요청 공문 수신 현황	120
8-1. 대통령, 국회 등에 보고된 업무보고서	121
8-2.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122
8-3. 각종 조사실시 현황	123
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직원(외부인사) 채용 현황	123
1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직원(외부인사) 퇴직 현황	123
11-1. 연도별 물품구매 현황	124
11-2-1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규정	125
11-2-2 연도별 물품 구매 계획서	125
11-3-1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규정	125
11-3-2 연도별 물품 구매계획서	126
11-4-1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 규정	126
11-4-2 연도별 물품 구매계획서	126
11-5-1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관련 규정	127

11-5-2 연도별 물품 구매계획서	127
11-5-3 연도별 물품 구매 리스트	127
12-1 연도별 채용 현황	127
12-2-1 전체 근무 인력 대비 여성, 장애인, 청년 근무 현황	128
12-2-2 장애인, 청년 근무 인력 리스트	128
12-3-1 연도별 전체 고위직 인원 대비 여성 인원·비율	128
12-3-2 여성 고위직공무원 리스트	128
13.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129
14.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신설, 폐지, 통폐합, 일몰(검토의견 포함) 사업 내역 및 사유	129
15. 재난안전매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129
16.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후원 및 기부 내역	130
17.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관련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 목록 ..	130
18.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외기밀문서 목록	130

• 김용민 의원

1. 2017년부터 청와대에서 운영한 TF 목록, 목적, 기간, 위원명, 직책, 주요활동내용	133
2.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청와대 관련 민원사항, 민원날자, 민원처리결과	133
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별 비위 및 비리 적발 현황	133

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현황	134
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강의를 나간 직원 명단, 강의 장소, 강의 일자, 강의 주제, 강의 대상, 강연료	135
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내역	135
7.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직속위원회 목록, 위원장, 주요활동, 활동별 예산 규모, 활동 성과	135
8.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급 이상 행정관의 출신지역 분포 현황	136
9.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위탁 및 용역계약 체결 업체, 업무 내용, 계약 비용, 계약 기간	136
10.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선공약 이행결과 및 추진 현황	137
1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청와대 전산 사고 발생 목록, 사고 내용, 발생일, 발생 사유, 처리결과	137
12.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해외 순방 목록, 방문 국가, 방문 기간, 방문 인력 규모, 순방 비용, 순방 성과, 순방에서 교환한 선물	138
1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전용기 사용 내역, 이동한 장소, 거리, 발생비용, 대통령 탑승 여부, 탑승 인원수	139
1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목록, 소송 당사자, 소송내용, 소송결과, 배상 현황	140
1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자료	140
1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인원, 신설채용, 퇴직 현황, 평균근속년수 및 지급된 임금 규모	143
17.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인턴직 선발규모, 선발시기, 선발과정, 면접위원 명단, 선발자 명단, 선발자 생년월일	143

18.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약해지 현황	143
19.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국내/외 출장 목록, 출장 인력, 출장에 지급한 비용, 출장 시기, 출장 내용, 출장보고서	144
20.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국외 연수 목록, 연수 인력, 연수 비용, 연수 시기, 연수 내용, 연수보고서	144
2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목록,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처, 사용자 직급 및 성명, 불용액	145
22.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준공 시설물 보수 보강 현황, 시설명, 보강비용, 보강 업체	145
2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급 이상 직원의 재산신고 내용	146
2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현황	146
2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훈포장 및 표창 수여 목록, 수여대상, 수여 사유, 수여 시기, 취소 여부, 취소 시 사유	146
2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검찰, 경찰, 국정원 직원 파견 현황, 파견 이유, 파견 규모, 업무 및 역할	147
27.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주관 청와대 행사 목록, 행사 목적, 참석자 명단, 행사 비용, 행사 내용	147
28.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급 이상 직원 중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자 현황(직급, 직책, 부처, 주 업무 내용)	147
29.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물품 교체내역, 교체 부처, 교체 비용?	148
30.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내역, 미공개시 사유	149

3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육아휴직직원 수, 휴가기간, 대체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149
32.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용, 영상회의 사용실적	150
3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공무원증 및 출입증 발급량, 회수량, 미회수량, 미회수 사유	150
3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내역, 구매품목, 구매비용	151
3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151
36.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52
37.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민생탐방 및 행사방문 내역, 장소, 시기, 연설여부	158

• 김정재 의원

1. 조직도	161
2. 현직 각 실장, 각 수석 비서관 및 각 비서관등 간부들의 약력	162
3. 청와대 부서별 업무 분장 및 급수별, 성별 근무 인원	164
4. 청와대 현재 과제별 특별보좌관 현황	165
5. 청와대 내 각 부서별 주요 중점 업무	166
6.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및 사유	167
7. 청와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파일	167
8. 청와대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기관 현황	167
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내 성비위 발생 현황 및 징계현황	167

10. 취임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결과, 감사결과보고서	168
11.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180
12. 취임 이후 자체감사 결과	182
13.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182
1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퇴직 현황	182
15.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186
16. 5급이상 별정직 직원 현황	186
17.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	188
18.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 결과	188
19.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188
20.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188
21.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소송 내역 및 결과 일체	189
22.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현황	189
23.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신규채용 현황	189
24.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연도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 현황	190
25.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연도별 공채 및 특채 채용 현황	190
26.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임금 현황	191
27.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홍보 현황	192
28.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홍보물 일체	192

2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용역 발주현황	193
30.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람 신청 현황	194
31.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발행간행물 목록	194
32.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연도별 직원 국외 출장 및 국외 여비 지급 내역	195
33.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	195
3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소속직원의 직무 외 영리수입현황	195
35.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	196
36.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196
37.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 관련	197
38.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사업별·목별 전용 내역서	198
3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사업별·목별 불용내역서	199
40.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사업별·목별 이월내역서	199
41.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각 연도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200
42.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자체지침	200
43. 2018년 이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	200
4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제2부속실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	201
45.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TF팀 운영 현황	202
46.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연도별 각 부서별 대통령 지시사항	202
47.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표창 발급 내역	202

48. 연도별 국민청원 등록, 답변 건수	203
49. 연도별 가장 참여 인원이 많은 청원 10개, 청원 내용, 참여인원, 답변 내용	203
50. 국민청원 비공개 기준	204
51.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	204
52.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입장	205
53. 2017년 12월 6일 2018년 초에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후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산업부 보고 내용 원본과 대통령 비서실 답변 원본	206
54. 2018년 3월 15일 산업부가 보고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원본	206
55. 2018년 4월 2일, 3일, 4일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원본	206
56. 2018년 5월 23일 경 산업부로부터 보고받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원본	206
57.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은 파일 일체	206
58. 월성 1호기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	206
59.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보고받은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문서 원본일체	206
60.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보고받은 “에너지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문서 원본일체	206
61.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현황	207
62.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NSC 개최현황	207
63.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207

64. 예산으로 집행된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사용내역 점검	207
65.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구성되어있는 감찰반 관련	208
6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주관한 사업의 용역계약 체결 내역	208
67. 2019년 3월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209
68. 2020년 3월, 8월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209
6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현황	209
70.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연도별 각 부처별 주요 업무 지시	210
7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 및 관련 주요 사업	210

• 박성준 의원

1-1. 현재까지 연평도 공동조사에 답하지 않는 등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정책이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우선한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데, 이런 구조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213
1-2.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	213
2. 북한 친서 관련	213

• 신원식 의원

1. 국민청원 개설이후,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청원 이유 및 전체청원 대비 비공개 비율	217
---	-----

• 이용빈 의원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21
--	-----

2.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이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접수 및 처리 현황	233
3.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233
4. 보도 해명자료 리스트 및 브리핑 내용	234
5. 최근 3년간 용역보고서 리스트 및 완료된 경우 보고서 파일	234

● **정점식 의원**

1. 실국별 업무편람	239
2. 업무편람, 규정집, 내규집 1부	239
3. 2017~2021년 예산안 설명자료	239
4. 최근 3년간 이용, 전용, 이월 및 불용된 사업 내역 및 사유	240
5. 최근 3년간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242
6.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242
7. 각종 통계집 현황	242
8. 기관평가결과(자체, 외부)	242
9. 산하기관 평가 관련 산하기관 자체작성한 평가보고서 중 미흡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점, 인사상 또는 예산상 조치내역	242
10. 감사자료(17년~20년)	243
11. 2015년~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45
12.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17년~20년)	257
13. 언론해명자료 및 정정보도요청내역	257
14. 징계 현황	258

15. 신규채용 및 퇴직현황	258
16.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263
17.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및 결과	263
18.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내역, 사유, 계획서	263
19. 민원, 진정, 청원 관련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264
20. 연구용역 현황	265
21.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266
22. '19~'20년 공문 접수 및 발송 목록 현황	266
23.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266
24. 국정과제 관련 (추진계획 및 변경된 내용, 추진실적, 평가결과)	267
26. 규제 관련(15년-20년 현재, 연도별, 총계)	267
27. 기관 관련 소송내역 - 승패소율, 사유	267
28. 20년 추진 중 주요 정책 현안 자료	268
29.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및 과제현황	268
30. 17~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목록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서	268
31. 17~19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268
32.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현황	268
33.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불수용 비율, 불수용 현황	269
34. 차량 구입 현황	269
35.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69
37. 대외기밀문서 지정 현황	270

38. 연구용역 현황	270
39. 후원 및 기부 내역	271
40. 동호회 활동비 지원 실적	271
41.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272
42. 조직도 및 대표연락처 현황	273

• 정희용 의원

1. 문재인 대통령의 2020.3.26. 재산공개 내역 중 ‘문재인 펀드 증가’ 항목의 1억9,166만원 관련	277
2. 문재인 대통령 관련	277
3.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일시/보고대상자/보고내용 관련 상세 내역	278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전현직 직원의 연루의혹	278
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 내부직원의 연루의혹 등에 대해 내부감찰을 벌였는지 여부와 내부감찰이 있었다면 감찰결과 보고서 사본	278
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횟수 및 출입일자	279
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혁진 前 AV자산운용(주) 대표이사의 청와대 출입내역	279
8.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되어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3인(이진아, 한모씨, 정모씨)이 근무한 비서관실명 및 직책	279

9. 공무원 총격 피살 관련 21일부터 3일동안 시간대 별 대통령 업무내역 및 내용	280
10. 사전 사건 인지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281
11. 공무원 총격 피살 관련 대통령 최초 보고 시점 및 입장	281
12. 23일 새벽에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281
13. 공무원 총격 피살 관련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연연설에 대한 적절성 판단자료	282
14. 22일 오후 6시 36분 대통령이 보고받은 “북측이 실종자 해상에서 발견했다” 첩보 첫 서면보고 내용 및 대통령 입장	282
15. 23일 1시에 열린 안보실장 주재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내용 및 결과보고서	282
16. 미국 및 주요국의 첩보를 입수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	282
17. 대통령 취임이후 NSC 개최내역, 회의주제, 대통령 참석여부	283
18.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 수석, 수석실 업무추진비내역	283
19.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284

• 조승래 의원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287
2.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지침 등 일체	299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99
4.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299
5.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299

6.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299
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300
8.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부처 관련 과제 및 각 과제별 이행 상황 ...	300

강 은 미 위원

1.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 방향을 제시('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 ○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 																				
<p>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 <p style="text-align: center;">< 정책 연구 추진 현황 ></p> <table border="1" data-bbox="740 981 1422 1664"> <thead> <tr> <th></th> <th>연구과제명</th> <th>연구책임자</th> <th>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td> <td>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3~10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td> <td>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3~10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td> <td>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3~11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td> <td>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3~11월</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p>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 -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 -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 ○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 나가겠음.
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p>○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p> <p style="margin-left: 20px;">*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양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p> <p>*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p> <p>** 중양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56.2%), (19)51.4(+69.5%)</p> <p>○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양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감,</p> <p>-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p>
<p>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p> <p>* ①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p> <p>** ①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③청년농업인 육성, ④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p> <p>-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p> <p>*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p> <p>○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p> <p>*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바우처)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p> <p>○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할 것</p>	<p>○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既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 *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p>○ 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 <p>○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p>
<p>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p>○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 -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 -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
<p>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정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p>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

2.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내용과 추진경과(2019~2020)

- '17.10.18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별첨1과 같습니다.

- 일자리위원회와 과제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세부과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9~2020년의 주요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4.10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보고 (제10차 일자리위원회)
 - '20.3.9 하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발표 (제14차 일자리위원회)

- 특히, 하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 일자리 문제 해결형 신규 및 보강 핵심과제 50개, 기타 지속추진이 필요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과제 50개를 발굴·선정하여 발표한 종합대책입니다. (두 계획 비교: 별첨2)

별첨1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주요내용

I

일자리의 의의 및 중요성

1 일자리는 인적자본 축적 기회 →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동력

- 양질의 일자리는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성장 역량을 제고
 - * 인적자본 축적계수(단순노무직=0, OECD평균): 준전문생산직 0.81, 전문직 1.31
 - ** OECD 33개국 인적자본지수와 1인당 GDP는 강한 상관관계(상관계수 : 0.709)
-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질 낮은 일자리 유입으로 이어져(이력효과) 빈곤층 전략 초래
 - * 일본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80%가 정규직이 되었으나, 실업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0~50%만이 정규직 재취업(12.8월, LG研)

2 구조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 + 사회적 편익 창출

-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경제전문가 39%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17.7월, KDI)
 - ** 실업률 1%p 하락시 출산율 증가(美, %p): (20-24세)1.3 (25-29세)0.9 (30-34세)0.5
- 고용기반 확대는 일을 통한 복지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사회안정성 제고(범죄율 하락, 세대갈등 완화) 등 무형의 사회적 편익 창출
 - * 실업률 1%p 상승시 인구 십만명당 강력범죄 14~32건 증가(13년, 美 50개주)

3 주요국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선정

- EU는 중기계획인 'Europe 2020'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위한 고용확대 노력 강화
- 美·中·日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경제정책 운용

⇒ 새정부는 시대적 요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내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부' 지향

II 일자리정책 기본방향

-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
 -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 질 개선

1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 대응

-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이 일자리효과로 이어지도록 국정시스템 재설계
- 전직·실업에 대한 불안을 덜고 재취업 기회가 충분히 확보 되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
- 기업이 필요로 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

2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자본의 부담 없이 창업·新산업·高부가서비스업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제3섹터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 마련
-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과 민간부문 생산성 향상을 지원

3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질 제고

- 비정규직 감축,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 및 휴식이 있는 삶 보장

4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정책대응을 통해 청년 고용애로*·여성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新중년 인생 3모작 여건 조성

* 25~29세 청년인구 : '17~'21년 38.8만명 증가(에코붐 세대효과), '22~'26년 37.2만명 감소 → 향후 4~5년이 청년고용의 애로시기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절실

Ⅲ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0개 세부 추진과제 제시 (세부 추진과제별로 연차별 이행목표 설정)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
① 일자리 인프라 구축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일자리 창출	② 공공	③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7개
	③ 민간	④ 혁신창업 촉진	6개
		⑤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업·신산업 육성	19개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6개
		⑦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④ 일자리 질 개선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⑤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주요대상별 일자리 지원	16개	

1 일자리 인프라 구축

(1)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① (정책수단)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예타 및 예산편성시 일자리 비중 확대

* (현행) 예산사업 249개 → (개선) 예산사업 1,000여개, 법안 고용영향평가제 신설

○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기업에게 세제지원이 집중되도록 제도 개편

* 고용증대세제 신설(설비투자 요건 제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등

○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지원대상·용자한도 확대 등) 하고 공공조달 및 정부 인·허가 과정에서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기업에는 불이익 부여

- ② **(평가·점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업무평가지 일자리 비중**을 확대·강화하고 **고용탑(신설)** 수여 등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포상 확대
 - ‘고용의 질’ 지표 개발, 일자리 동향 행정통계 작성 등 **일자리통계** 확충

[2]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 ① **(일자리 안전망)**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 (고용보험) 특고·예술인 적용 확대, 고령자·지역업자 가입요건 완화, 두루누리 지원대상 확대 (산재보험) 적용직종 확대,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 * 구직급여 수준 인상·기간 확대,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 완화, 산재노동자 복귀지원 확대
 - 고용센터 기능 효율화,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등 **공공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 실직 건설기술자의 **국내·외 취업알선**(건설워크넷) 활성화
- ② **(인재양성)**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기술융합형 일학습병행제 과정 확대, 中企 취업 연계 장학금 도입,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과 **미래 유망분야 인력 양성*** 지원
 - *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지정,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등
 - 융합교육과정 활성화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대학의 **예비창업자 보육기능** 강화 (대학창업기업 투자펀드 확대 등)
 - 평생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 생애전환기 경력진단시스템 구축,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등 **소생애에 걸친 교육·훈련시스템** 마련
 - **중장기 인력수급**에 대해 **2년** 주기로 신규 전망하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기술자격 신설·개편

2

공공일자리 창출

(3)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1 (현장민생공무원) 안전·치안·사회복지 등에서 '22년까지 17.4만명 총원

- ① 국가직(10만명) : (경찰) 의무경찰 전환, 순찰 및 수사인력 보강 등에 활용 (2.3만명)
(부서관) 청년인구 감소추세 선제적 대응, 전문 기술군 양성 (2.6만명)
(교원)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영양·상담 등) 중심으로 인력 총원 (2만명)
(생활안전 등) 근로감독, 감염병 대응, 집배원 등 행정서비스 강화 (3.1만명)
- ② 지방직(7.4만명) : (소방) 119구급대 등 총원하여 화재·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2만명)
(사회복지)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확대 (1.9만명)
(생활안전 등) 보건의료·가축방역 등 생활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사무처리 및 지자체 서비스 수행으로 주민편의 향상 (3.5만명)

2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보육·요양·보건·장애인·환경·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22년까지 34만명 수준 일자리 확대 → 1단계 17만명 우선 추진

- ① 1단계(17만명) :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총원 등 (6.4만명)
(요양) 치매 예방·관리 인력, 노인돌보미 등 확대 (4.1만명)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필요한 인력 확충 (2.4만명)
(보건의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증진 지원강화 등 (3.5만명)
(환경문화 등) 숲해설사,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인력 등 총원 (0.6만명)
- ② 2단계(17만명)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 제정 및 시·도 공단 설립을 추진('18.下~)하고, 분야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민체감형 일자리 총원

3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22년까지 30만명 내외 확충

- ① 정규직 전환(20만명) : 상시·지속적 업무를 3단계(정부·지자체·공기업→지자체 출연기관·공기업 자회사→민간위탁기관)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
- ② 공기업 인력 총원 등(10만명) :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한 공기업 필수인력 총원 +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등

3

민간일자리 창출

(4) 혁신창업 촉진

- ① **(민간중심)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혁신성 중심(보증·대출유형 폐지)으로 개편**하고, 민간중심 기술창업 프로그램인 TIPs 지원규모 확대
 - 세대융합·팀창업 등 다양한 혁신창업 유형을 발굴·육성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명칭변경) 역할 재정립 등 창업거점 마련
- ② **(혁신기술창업) 대학·출연연 평가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술인력 창업을 촉진*** 하고, **우리사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 (교수) 창업휴직기간 확대, 창업실적 등을 대학평가 및 LINC+ 평가지표에 확대반영 (연구원·공공기관) 창업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창업촉진 인사제도 평가 우대
 - ** (현행) 기업근로자 400만원 소득공제 → (확대)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 인정
- ③ **(창업위험분산) 기보의 투자역할 강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연대보증 전면폐지(7년초과기업) 등 **제도전 안전망 구축**
 - * 투자연계보증제도 신설,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확대(10%→20%) 등
- ④ **(부담 및 규제 완화) 벤처투자 진입 및 행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및 세제특례 확대
 - * 창투사의 설립자본금 및 전문인력자격 완화, 투자금지업종 최소화 등

(5) 산업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신산업 육성

- ① **(주력제조업) 투자·일자리 애로에 대한 밀착지원 및 9대 업종에 대한 高부가가치산업 전환 등 ‘산업혁신 전략’ 수립(17.下)**
 - 외투·유턴 등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하여 고용효과 중심으로 재설계
 - * 세제·입지·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고용효과 최우선으로 개편
- ② **(미래신산업) 스마트카, ICT신산업, 산업용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 생활밀착형 일자리 신산업 발굴을 위해 **對국민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SW·R&D·방위·환경산업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 (SW산업)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22년 100개), 공공SW 발주 개선 (R&D산업) 과학기술기반 좋은 일자리 창출계획 및 연구산업 육성법(안) 마련(18년)
 - 신산업·직업 창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 신제품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 *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 전환을 위한 입법 추진,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개별규제 해소
 - ** 민간의 시범사업 신청 허용, 임시허가 기간연장(2~4년),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등

- ③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강화**(中企 R&D 혁신방안 마련), 혁신제품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 * 수출바우처·무역보험 지원 확대, 조달시장 진입여건 개선, 판매 네트워크 확충(전자상거래 초보기업 소주기 지원,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해외 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 성장걸림돌 제거, 우수기업 우선지원 등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마련**
- ④ **(서비스업)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수요 흡수를 위한 인프라 확충, 기업 해외진출지원 강화 등 **서비스의 글로벌화 추진**
- * 클라우드 펀딩 규제완화(광고허용, 전매제한 완화, 투자한도 확대),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제조지원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관광·교육·유통 등 기존 서비스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SW 기반형 산업구조 전환**
- * 문화·관광·교육 등과 ICT 신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콘텐츠 개발, 유통산업에 첨단 ICT 도입

(6) 사회적경제 활성화

- ① **(인프라) 보증지원 확대 등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체계 개편**(입찰시 가점확대, 수의계약제 신설)
- * 신보·지신보 보증지원한도 확대, 전용투자펀드 확충
- 정책 컨트롤타워 확립(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 5개 대학 사회적경제 관련 학위·비학위과정 개설, 창업지원을 위한 소셜캠퍼스 온(溫) 확대
- ② **(진출분야) 사회서비스·도시재생·문화예술·프랜차이즈·신재생에너지·소셜벤처 등 장점분야 진출을 위해 제도 정비**
-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진입요건 완화 등을 통한 창업 및 주요 정책사업 참여 촉진

(7) 지역일자리 창출

- ① **(일자리거점) 인센티브 제공, 프로젝트 실증 등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단 근로·정주환경 개선(환경개선사업 통합·개편)
- 지역특구 규제특례를 **확대·개편**(테스트베드형 지역특구 도입, 판교모델 확산)하고 **구도심을 활용한 스타트업 센터 등 혁신공간 구축**
- ② **(지원체계) 지방투자보조금·시도간 협력사업을 지역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참여주체의 창업 등 경제활동 지원**
- 지역별 **모범 일자리모델 발굴·확산**,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22년 30%) 등을 추진하고 **경자구역 등 지역입지제도 효율화 및 연계 추진**

4

일자리 질 개선

(8)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 ① **(남용방지)** 기간제한→사용사유제한 개편, 생명·안전 직결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등 정규직 채용원칙을 확립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 고용형태·기업공시제 강화, 비정규직 과다사용시 공공조달 감점, 정규직전환 재정지원 확대
- ② **(차별해소)**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비교대상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 축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장 강화*
*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급여·연차휴가 부여, 여성 비정규직 출산휴가급여 보장
- 원·하청 노동자 격차 해소·특고 보호방안 마련, 과전·도급 구분기준 정립, 비정규직 의견통로 확대(노사협의회 개선) 등 취약근로계층 권익 개선

(9) 근로여건 개선

- ① **(공정임금 확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병행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등)하고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 임금체불근절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연공급→직무중심)을 선도하고 민간은 공정임금 인프라 구축
* 미지급임금 지연이자제 확대,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임금채권보장기구 신설
- ② **(근로환경 혁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존중 기본계획 수립 등 근로환경 개선 추진
* 주 52시간 근로 확립(특례업종 최소화, 포괄임금제 규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단축청구권 도입
- 중대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 추진(위험작업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강화 등)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10)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① **(청년)** 구직(구직촉진수당 신설, 해외진출 지원방안 수립)·채용(공공기관 의무고용 비율 한시상향, 3→5%)·근속(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부문별 애로 해소
- ② **(여성)** 일·생활 균형*(육아휴직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새일센터 확충, 재고용기업 세제지원 강화) 지원
* 임신, 육아뿐만 아니라, 보육, 학업·훈련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
- ③ **(신중년)** 장기근속(희망퇴직 남용방지)·전직(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기술창업 확대)·신규일자리(적합직무·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지원

별첨2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하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비교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	----------------	------------	------	----------	------	-------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시스템 강화 [협력 거버넌스 보완·운영]

1	협력 거버넌스 보완·운영	지역혁신	보강 (19, 39, 63)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마련 및 제출 	단기	~'20.9
		중기지원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고용전문위원회 운영 	중장기	'20.1~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지원채널 효율화 방안' 마련 	단기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운영 	중장기	'20.1~
인재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운영·활성화 	중장기	'20.1~			
2	고용영향 평가 강화	지속	고용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혁신	지속	고용기재				
4	일자리 관련 입법의 신속추진 지원	지속	고용법제				
5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포상	지속	고용				
6	일자리 통계 확충	지속	통계				
5년 로드맵 추진 계획 완료 과제	타당성 심사 시 일자리 지표 강화	완료	고용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방안(17.8)에 포함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개정(17.9) 			
	예산편성시 일자리 비중 확대	완료	중기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지침 개정(18.1) 일자리평가지표 비중20% 배정 			
	고용친화적 세제 개편	완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18.3) 			
	일자리 중심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	완료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책은행 경영실적평가지침 개정(17.11) 			
	공공조달 안하키시 일자리평가강화	완료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용역·시설 적격심사기준 등 평가체계 개편(17.9)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평가 비중확대		국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17.7)에 반영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지 일자리 평가 강화	완료	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지표 개발 완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19.9) 			
	공공기관 경영평가 일자리 반영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반영(17.7) 일자리창출 신규 지표 반영(17.12) 			
일자리추진체계 강화	완료	행안 국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관리지침 개정·시행(17.9) 자치단체 지침 시달(17.11) 및 이행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	----------------	------------	------	----------	------	-------

◆ 지역 일자리

7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굴·선정·지원·확산 추진	보강 (70)	산업	■ 상시지원체계 가동 및 컨설팅 등 제공	중장기	'20.~
				■ 「균특법」 시행 후,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선정(20년, 3개 이상 발굴·추진)	단기	'20.
				■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중장기	'20.~
8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	신규	산업국토	■ 5개내외 지역의 산업단지혁신계획 선정·우선착수(21년 협업예산 편성, 성과 보아가며 '22년까지 전국 15개 내외로 확대)	단기	'20. 상
9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신규	고용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대상을 가선택정(20.2월)하여 사업계획 컨설팅 후, 사업협약 체결(20.4월)	단기	'20.4
10	지역혁신성장추진	지역주도의 전략산업 육성	지속 (일부 추가)	균형위 산업	중장기	~20.4
				산업		
11	규제자유특구 확대	지속	중기			
12	연구개발특구 확대 및 연구소기업 육성·활성화	보강 (61)	과기	■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중장기	'20.~
				■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본격 육성	중장기	'20.~
				■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마련	단기	'20. 下
13	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	신규	교육	■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	중장기	'20.~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 발표	단기	'20.1/4
14	금융서비스 경쟁촉진 및 혁신인프라 구축	지속 (일부 추가)	금융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중장기	'20.~
15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지속	국토기재			
16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속	산업국토			
17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 거점 육성	지속	국토			
18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지속	국토			
	일자리창출형 산업단지 구축	완료	산업	스마트공장 구축, 산학융합지구 확충, 근로·정주환경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중 '산업단지 대개조 후속조치를 통해 추가계획 추진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	----------------	------------	------	----------	------	-------

◆ 신산업·서비스 일자리

19	혁신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촉진	보강 (46)	과기	■ 핵심인프라 분야 공공 선도투자	중장기	'20.~
				■ 차세대 핵심 인프라 조기 상용화	중장기	'20.~
20	S/W혁신·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지속	과기			
21	과학기술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지속	과기			
22	신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위한 규제정비	보강 (45)	국조 과기 산업 중기	■ 입법방식 유연화 확산	단기	~'20. 4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규제샌드박스, 현장규제 애로해소 등 규제혁신 지속추진	중장기	'20.~
23	지식서비스 육성·활성화	신규	산업 특허 중기	■ 민간 IP거래 활성화	중장기	'20.~
				■ 우수특허 창출·사업화 촉진	중장기	'20.~
				■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25)' 수립	단기	'20.
24	'사람중심의 돌봄경제' 육성 등 통합돌봄 서비스	신규	복지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돌봄경제 확산방안' 마련	단기	'20.3/ 4
				■ 공동 돌봄 협동조합 활성화	중장기	'20.~
25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신규	복지 교육	■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중심, '일·가정의 양립 방안' 마련	단기	'20. 下
26	콘텐츠 산업육성 및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	보강 (51)	문체	■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단기	'20. 下
				■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제정 추진	단기	'20. 上
	■ 맞춤형 문화예술 체험참여·교육 서비스 확대		중장기	'20.~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		문체 해수			
27	환경서비스	보강 (52)	환경	■ 업사이클 산업육성 로드맵 마련	단기	'20.2/ 4
				■ 국토청정화 사업 추진계획 마련	단기	'20. 上

◆ 중소기업·벤처 일자리

28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	스마트 공장·서비스·상점 기반조성	신규	중기	■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 추진	중장기	'20.~
					■ 스마트서비스 및 스마트상점 등의 사업추진	중장기	'20.~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강화		금융	■ 중기 제조업 스마트화·친환경화 등 지원	중장기	'20.~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29	중소기업 창업 및 성장기반 정비	법령 정비 등 추진	지속 (일부 추가)	중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단기	'20. 下
		벤처기업 확인 제도 전면개편			중기	■ '창업 지원사업 연계·효율화 방안' 마련	단기
30	중소·벤처기업 대상 금융·연구개발·기술보호·판로 등 지원 확대·강화		보강 (31, 33)	금융 중기	■ 신산업 진출혁신 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중장기	'20.~
					■ R&D, 기술보호 등 '주요 핵심분야의 중소기업 정책개선' 추진	중장기	'20
					■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공동브랜드(BRAND K) 확산·지원 강화	중장기	'20.~
31	세계 4대 벤처강국 구현을 위한 스케일업 강화	대규모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조성	신규	중기	■ 스케일업 펀드조성 등 모태펀드 출자	중장기	'20.~
		유니콘 기업육성 지원체계 마련			중장기	'20.~	
		도약기 기업의 스케일업 집중지원			중장기	'20.~	
		■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 개편방안' 마련			단기	'20.2/ 4	
32	고급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지속	중기 교육과기			
33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보강 (39)	중기	■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추진	중장기	'20. 下~
					■ 'K-스타트업 스마트타운 조성방안' 마련·검토	단기	'20. 上
34	중소기업의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선지원		신규	중기	■ 경영약화 방지 등 공공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	중장기	'20.~
					■ Pre-회생컨설팅 신설 및 재도약 패키지 추진 등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 강화	중장기	'20.~
35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		보강 (43)	중기	■ 「상생협력법」 개정	단기	'20
					■ 성과공유 기업의 유형과 인센티브 확대	중장기	'20.~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확충		완료	중기 조달	.팁스(TIPS)모델 확산 및 공영 홈쇼핑 방송시간 확대 등 추진		
	창업·벤처 자금 조달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		완료	중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확대 등을 위한 법률개정(18.6) (창업벤처 정책자금 관련 추가목표는 연관과제 등을 통해 달성)		
	창업·벤처 부담 및 규제 혁신		완료	중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18.12) 및 시행령(19.6) 개정 완료 등 추진		

◆ 소상공인 일자리

36	온라인 진출·스마트화 등 혁신지원	신규	중기	■ 온라인 진출 플랫폼 활성화	중장기	'20.~
				■ 데이터 기반 서비스 실현	중장기	'20.~
37	지역상권 활성화	신규	중기	■ 특성화콘텐츠 융합 등 매력있는 시장상권 육성	중장기	'20.~
				■ 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 제도 도입	중장기	'20.~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38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및 재기 지원강화	보강(34)	중기	■ '한계 및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 마련	단기	'20.1/4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완료	중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 제조업 일자리

39	주요 프로젝트 집중지원으로 민간투자 적기이행 지원	신규	산업	■ 2020년 주요 프로젝트 선정·집중지원	단기	'20.
				■ 대규모 프로젝트 전담반 추가 구성	단기	'20.
				■ 신규 프로젝트 지속발굴 및 지원시스템 구축	중장기	'20.~
				■ 선제적·맞춤형 투자 애로요인 해결체제 구축	중장기	'20.~
			국토	■ 중앙도시위, 수도권정비위 등 심의주기 단축	중장기	'20.~
40	생산성 향상지원, 신산업육성, 주력산업 혁신을 통한 일자리창출	보강(37)	산업중기	■ 일자리 고도화 R&D, 디지털 혁신지원 등 추진	중장기	'20.~
			산업중기복지	■ BIG3 중심의 신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중장기	'20.~
			산업	■ 기존 주력산업 대상 맞춤형 전략추진	중장기	'20.~
			산업국토	■ 디지털 엔지니어링 전환 등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단기	'20.上
41	제조 중견기업 및 소부장 집중육성을 통한 고용여력 확대	보강(38, 39)	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2차 기본계획'(20.2) 후속조치 이행 강화	중장기	'20.~
			기재과기산업	■ 100+α 핵심품목 대상, R&D 예산 5조원 이상 집중투자	중장기	'20.~
			산업중기	■ 스타트업→강소기업→글로벌 명장 기업으로 체계적 성장지원	중장기	'20.~
42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성장산업 발굴·육성	신규	농식품	■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19.12) 이행 강화	중장기	'20.1~
			해수	■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산물 수출확대 전략' 마련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확충, 수출주도형 신규 클러스터 조성 등 수산가공업 육성 추진	단기 중장기	'20.1/4 '20.~
43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지원강화	지속	산업중기			
44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해수산업			
45	외국인투자 및 유턴제도 개편	지속	산업			
46	방위산업 진흥	지속	방사청			
	제조업 활력 회복	완료	산업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수립(17.12)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성장대책 수립·추진)	완료	산업중기	중견기업 정책 혁신방안 마련·발표('18.2)		

◆ 건설 일자리

47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보강 (54)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 혁신 및 스마트 건설육성 ■ 혁신성장 거점 구축 및 SOC 확충 	중장기	'20.~
48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	보강 (82)	고용국토	■ 건설근로자 고용구조 개선과제의 현장안착	중장기	'20.~
				■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	단기	'20.3
				■ '건설일자리 체불근절 종합대책' 마련	단기	'20.上
				■ '건설안전 혁신 방안' 수립	단기	'20.上
				■ 공공현장 일자리정보 종합제공·내실화 추진	중장기	'20.~

◆ 사회적경제 일자리

49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촉진	보강 (56)	기재고용중기	■ R&D 지원 및 성장거점 마련 등 기반 구축	중장기	'20.~
				■ 기업성장 및 판로확대 지원 강화	중장기	'20.~
50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지속	기재고용행안			
51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지속	기재교육고용			
52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확산	보강 (59)	기재고용중기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확산 및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	중장기	'20.~
				■ 소셜벤처 등 청년창업형 사업모델 지원확대	중장기	'20.~
				■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모델 확산	중장기	'20.~
				■ 노동자 중심의 협동조합 활성화	중장기	'20.~
53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	보강 (59)	복지	■ 돌봄·건강분야 공공성강화 및 서비스 질제고	중장기	'20.~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대	단기	'20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54	분야별 커뮤니티 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고유특색의 관광사업체 육성	신규	문체	■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발굴·육성	중장기	'20.~
		생태 관광		환경	■ 생태관광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중장기	'20.~
		농업의 사회적 기능 확산		농식품	■ 사회적농업 실천 농장 확대	중장기	'20.~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기	'20.1/4
공동체 중심의 산림비즈니스 육성	농식품 산림해수	■ 산림자원 활용, 주민사업체 육성 및 산촌주민의 새로운 일터 제공 등 추진	중장기	'20.~			
		■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 ('19.12) 이행강화	중장기	'20.~			
55	사회적경제 금융접근성 제고		지속	금융기재			
56	사회적가치 실현체계 구축		지속	기재			

◆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고용여력 뒷받침

57	주요 일자리사업 조기집행	보강 (11)	고용	■ 일자리에산 조기집행 및 운영과정 관리총괄	단기	'20. 상
			복지	■ 사회서비스 일자리 조기집행 추진	단기	'20. 상
			행안	■ 지자체 일자리 사업 추진점검 및 이행관리	단기	'20. 상
58	현장민생공무원 국가직 10만명	지속	행안기재			
59	현장민생공무원 지방직 7.4만명	지속	행안			
60	사회서비스 1단계 17만명	지속	복지			
61	사회서비스 2단계 17만명	지속	복지			
62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공공기관 인력충원, 근무시간 단축 등 포함)	지속	고용기재인사			
63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강 (25,26)	복지	■ '21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방안' 마련	단기	'20.3/4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64	노인일자리 사업 개편	신규	복지	■ 노인일자리 세부 사업별 내실화 추진	중장기	'20.~
			복지	■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보강 등 추진	중장기	'20.~
	공공기관 인력충원	완료	기재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발표('17.11) 및 이행 (향후 이행점검은 후반기 61번 과제에 포함해 지속관리)		
	정부기관 근무혁신	완료	인사	공무원 근무혁신지침 통보('19.2) 및 이행 (향후 이행점검은 후반기 61번 과제에 포함해 지속관리)		

◆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및 일터 혁신**

65	공정한 채용관행 확산	지속	고용				
66	공정임금체계 확립	지속	고용				
67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신규	고용	■ 임금직무 인프라 지속확충, 직무중심 인사 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신설 등 추진	중장기	'20.~	
68	공공기관 및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신규	기재 고용	■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에 대한 논의 활성화	중장기	'20.~
		공무원	고용	고용	■ 공무원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 모색	중장기	'20.~
69	임금·복지 격차 완화	지속	고용				
70	사회적 대화 지원·활성화	지속	고용				
71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수립	지속	고용				
72	임금보장 강화 (체불 근절 체불 근로자 보호 등)	지속	고용 국토				
73	노동시간 단축 현장 정착 및 일터 혁신	노동시간 단축	지속 (일부 추가)	고용			
		일터혁신	고용	고용	■ 민간주도 확산 기반 등 마련	중장기	'20.~
74	산업안전 혁신	지속	고용				
75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속	고용				
76	고용·산재보험 보호수준 강화	지속	고용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77	산업보건 사각지대 해소	보강 (13, 14)	고용 복지	■ 근로자 건강센터(21개소→23개소) 및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센터(1개소→8개소) 등 확대	중장기	'20.~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 및 작업 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강화	중장기	'20.~
78	일·생활 균형 고용·근로 문화 확산	지속	고용			
79	기간제 사용 최소화 위한 제도개선	지속	고용			
80	정규직채용 여건조성	지속	고용			
81	비정규직 차별 적극적 해소	지속	고용			
82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지속	고용			
83	비정규직 의견참여 통로확대	지속	고용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안전망 완성**

8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일자리예산 및 사업범위 지속확대	보강 (3, 4, 9, 18, 19)	고용	■ 직업능력개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중장기	'20.~
		일자리사업 성과중심 평가강화		고용	■ 일자리 사업 신설·변경시 고용부 사전협의 의무화('20.4) 등 추진	중장기	'20.4 ~
		신기술분야 훈련 지속확산		고용	■ 폴리텍 대학의 신산업 학과 신설·개편	중장기	'20.~
				교육 고용	■ 전문대 참여 활성화 등 추진	중장기	'20.~
85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보강 (15)	고용	■ 고용센터 서비스 기반 강화	중장기	'20.~
					■ 온라인 고용서비스 구축·제공	중장기	'20.~
					■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단기	'20. 상
8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규	고용	■ '20년 제도 도입 및 관련법령 마련시행 적극추진	단기	'20	
	구직촉진지원제도 개편	완료	고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제도 도입('19.3)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	----------------	------------	------	----------	------	-------

◆ 맞춤형 지원

87	청년 사업확충	청년 3대 핵심사업의 내실화 도모	보강 (86)	기재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까지 한시사업에 대한 성과, 연장 필요성 여부 등 연구용역 추진 	단기	'20
				국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청년사업 장기개편 방안' 마련 	단기	'20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일자리·주거·교육·생활지원 등 개선 방안' 마련·발표 	단기	'20.3
	청년 취업지원 및 구직 서비스 강화·확대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청년고용협의회 중심, 청년취업 관련 기관간 연계·협업 강화 	중장기	'20.~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구직을 위한 진로탐색 지원 확대 	중장기	'20.~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대상 고용 서비스 연계 강화 	단기	'20.	
	콘텐츠산업 청년 취창업 지원	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제식 교육 및 대학-기업간 연계강화 	중장기	'20.~		
88	공공기관 청년고용 확대	지속	고용				
89	청년의 해외진출 촉진	지속	고용 외교				
90	청년진출 유망 신직업 발굴 및 관련인프라 구축	지속	고용				
	고용장려금 제도개편		완료	고용	유사·중복사업 폐지 및 예산안 등에 반영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고시개정('19.1) 등 추진		
91	40대·신중년 등 맞춤형 지원	40대	보강 (95, 96)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대 고용활력 제고방안' 마련 	단기	'20.3
		신중년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취업 및 활용 지원 방안' 마련 	단기	'20.2/ 4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규모 이상 기업 대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 	단기	'20.5
	신중년 창업 활성화		완료	중기 고용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팀 선정 완료 등 추진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개시('18.1) 재창업 패키지 사업 확대 등 완료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92	여성		보강 (91, 92, 93)	여가 고용	■ 일·생활균형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확대	중장기	'20.~	
					■ 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중장기	'20.~	
					■ 새일센터 유형개편 및 경단여성DB 구축	중장기	'20.~	
					■ '경단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단기	'20.2	
	여성일자리 인프라 구축		완료	고용 여가	.아이돌봄 정부지원 비율상향 및 시간제 정부지원 확대 등 추진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내실화 추진			
93	장애인		보강 (99)	고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 「장애인 고용법」 개정 추진	중장기	'20. 下~	
					■ 장애인 직접지원 강화 및 고용장려금 인상	중장기	'20.~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전국 확대 등 추진	중장기	'20.~	
					■ '장애인 일자리 대책' 마련	단기	'20. 上	
94	농어촌	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보강 (41, 98)	농식품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편방안' 마련	단기	'20. 上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중장기	~'22.	
					■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추진	중장기	'21.	
					■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확산	중장기	'20.~	
		어촌 일자리 창출력 강화			해수	■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21.
						■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단기	'20.10
						■ 어촌뉴딜 300사업 지속추진	중장기	'20.~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중장기	'20.~
95	외국인력 적정관리 체계 구축		지속	고용				

◆ 인적자원개발 및 미래변화 대비 등 중장기 이슈에 대응

96	직업 능력 개발 강화	평생 직업·교육 훈련 기반조성	보강 (17, 20, 21)	교육 국토 환경	■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지속추진·성과 가시화	중장기	'20.~
					■ '2020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단기	'20. 上
					■ 미래 변화에 대비한 교육체계 혁신	중장기	'20.~
		기업·산업 맞춤형 훈련 확산		교육	■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활성화	중장기	'20.~
					■ 산학연계 현장중심 교육 등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마련	단기	'20. 上
					■ '대학연계 산업맞춤 인력양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수립	단기	'20. 下

연번	100대 과제 (세부과제)	5년로드맵과의 관계	주관부처	주요 계획(안)	추진기간	일정(안)	
97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고급융합 전문인력 양성	보강 (18)	교육	▪ 두뇌한국 21 (4단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중장기	'20.9 ~	
			과기산업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산업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20.~	
				▪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확대 및 효과성 제고	중장기	'20.~	
				▪ 미래 첨단산업 선도 고급연구인재 육성 (KIURI 사업단) 신규 추진	중장기	'20.~	
			▪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마련	단기	'20. 下		
98	국가기술자격 개편 및 역량체계 구축	지속	고용				
99	플랫폼경제 도래에 대비	신규	고용	▪ 플랫폼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사회적 대화 지속추진	중장기	'20.~	
100	저탄소경제·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신규	환경	▪ 국내산업에 녹색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 성장 체계 마련	중장기	'20.~	
				▪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계기,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 마련	단기	'20.6	
			산업	▪ 재생에너지, 수소, 효율연계 산업 신시장 창출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	중장기	'20.~	
총 계		① 5년 로드맵 대비 신규과제: 20개 ② 보강 과제: 30개 ③ 지속 과제: 50개 ※ 5년 로드맵 완료과제(20개): 각 분야별로 재분류하여 표시					

3.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및 원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계획' 추진 결과(2019~2020)

1.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보편적 수준의 노동권 보장 추진

□ '18.7~'19.5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추진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논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9.4.15.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안이 발표되었으나, 노·사 이견으로 합의 결렬('19.5.20)

□ 정부는 '19.5.22. 노사정 합의 결렬 직후,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

* 노동부장관 브리핑 주요 내용: ① 3개 협약(강제노동 제29호, 결사의 자유 제87호·제98호) 비준안 제출 ② 법 개정 병행 ③ 비준안과 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제출

□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마련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비준안('19.7.22) 및 법 개정안('19.7.31) 마련

- '19.10.4.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20.5.29.)

- 협약 비준의 시급성·중대성을 고려해 21대 국회 개원 즉시 비준을 재추진하여 개정법률안 및 비준동의안 국회제출 완료

* 노동관계법(6.30. 환노위), 병역법(7.2. 국방위), 비준동의안(7.14. 외통위)

2. 원청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추진

□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사업주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20.1.16)

-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장소를 원청 사업장 전체 및 21개 위험장소로 확대*

* 기존에는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장소의 경우에만 원청이 책임 부담

- 원청에서 업무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하는 의무 신설

- 장기간 노출 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승인받도록 제도 신설

* (도급금지)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압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작업 (도급승인) 농도 1% 이상의 ①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 설비 개조·분해 등 작업 ②해당 설비 작업

-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하청노동자 산재발생 시 원청사업주 처벌 강화*

* (안전보건조치 위반)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5년 이내 재범 시 1/2 범위내 가중), 수감명령 병과 가능, 법인에 대한 10억 원 벌금 신설

□ 하청·파견근로자의 산재를 원청(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 요율*에 반영토록 보험료 징수법 개정 추진(20.7월~)

* 개별 사업의 재해발생 실적(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최대 ±20%)하는 제도

□ 원청이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19.12월~)

* 500인 이상 제조업, 도시철도운송업, 철도운송업 → '전기업종' 추가

4. 전국 불법·방치폐기물(120만톤) 처리계획('19.4)에 따라 연내 전량처리 및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결과

- 정부는 「불법·방치폐기물 처리계획('19.4)」에 따라 총 120.3만톤의 처리대상 폐기물 중 '20.8월말 기준 112.8만톤(94%)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폐기물배출자 의무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불법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19.11, '20.5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상기 관련 구체적 내용은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구용역 현황

□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백만원)
2017	주요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9.0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9.5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9.2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9.2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9.7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재고	9.3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9.3
2018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64.0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18.99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31.2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분석	9.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19.0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9.5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8.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9.0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9.5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9.5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27.1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9.5
	2019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시민사회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18.6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 방안 연구 방안		29.0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9.75
대외 외교 경제 주요 현안 관련 조사 연구		28.5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인력 적정 규모 산정모델 연구		9.4
정부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21.3
UN SDGs 추진을 위한 민간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현황 및 방향		38.5
교육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		9.9
미래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9.5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 본 평화정제론 발전을 위한 시사점 연구		9.4
중·단기 주요 외교안보분야 도전 과제 및 대응 전략		9.8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성과와 과제		9.5
2020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38.8
	국가 재난발생시 효율적 자원봉사체계 구축방안 연구	39
	코로나19 위기관리 공공거버넌스 혁신 연구	25.5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유형 및 대응방향	21.5
	한반도정책 관련 대미정책소통 추진방향	7.9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방향	7.9
	인간안보 개념의 특징과 한반도 적응을 위한 전략	7.7
	코로나이후 국제안보질서 변화 전망	8
동아시아 전략경쟁 평가	7.9	

6.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 관련 규정

- 인사검증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최근 5년간 청와대 예결산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 청와대 결산심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요구하신 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 관련 사항은 관계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자료 작성에서 제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2017회계연도 (총 10건)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1)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준수 필요	<p>○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각 분기별로 6%, 30%, 30%, 34%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분기별로 14.5%, 17.6%, 14.2%, 53.7%를 집행하여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에 편중되게 집행한 측면이 있음</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자산취득비를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p>	제도개선	<p>○ 19년도부터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말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p>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p>(2) 연가사용 활성화에 따른 연가보상비 적정 편성 필요</p>	<p>○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7년도 연가보상비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중 2억 2,100만원만 집행하고 2억 8,8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이 43.4%에 불과함.</p> <p>-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수행하기 위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함에 따라 연가보상비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며, 이와 같이 연가사용을 권장하는 문화가 정착 시 향후 연가보상비 집행도 연례적으로 저조할 가능성이 높음.</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직원들의 연가사용일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향후 연가보상비의 과도한 불용을 막기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할 것</p>	<p>제도개선</p>	<p>○ 19년도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 시 연가보상일수를 작년보다 축소하여 편성하였음(10일→9일)</p>	<p>조치완료</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3) 구정평가관리 사업 집행실적 부진	<p>○ [지적사항] 2017년도 동 사업 예산 38억 6,800만원 중 23억 4,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0.7%에 불과하며,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5.4%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음.</p> <p>- 특히 연구용역비의 경우 2017년도 예산 23억 1,700만원 중 12억 8,1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55.3%에 불과함(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은 78.1%).</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등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 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주의할 것</p>	주의	<p>○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19년 동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음('18년 6,158백만원 → '19년 4,491백만원)</p>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p>(4) 정책연구용역 공개범위 확대 필요</p>	<p>○ [지적사항] 동 사업의 2017년도 정책연구용역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 2억 7,0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전 정부가 2,69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 정부는 3,690만원을 집행하여 4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음.</p> <p>-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가 추진한 4건의 정책연구용역 중 1건은 공개하고 있으나, 나머지 3건은 용역 집행내역은 물론 연구과제명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p>	<p>제도개선</p>	<p>○ 18년도 수행한 총 10건 중 공개 가능한 2건에 대하여 대국민 공개 완료하였으며</p> <p>-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제외하고는 대국민 공개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p>	<p>조치완료</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p>(5) 사이버교육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p>	<p>○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업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양질의 교육내용으로 구축된 사이버교육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2017년도 예산 2,500만원을 편성해 전액 집행하였음.</p> <p>- 2017년 동 사이버교육원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이용인원이 1,166명으로 월 평균 97명만이 활용하고 있어 운영실적이 저조함.</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관 내 업무전망상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안내하는 등 사이버교육원 학습실적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제도개선</p>	<p>○ 매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 콘텐츠를 직원들에게 안내·홍보하는 등 사이버교육원 학습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시 중에 있음</p> <p>※ '18년 연간 이용인원(1,329명)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p>	<p>조치완료</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p>(6)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필요</p>	<p>○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에 2017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음.</p> <p>- 그러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콘텐츠 업데이트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인원과 비교하면 방문인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음.</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체도개선</p>	<p>○ '18년 12월에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 하였음</p> <p>- 상식·과학·문화유산·전래동화 등 어린이 교육용 콘텐츠 및 기능 강화 등</p>	<p>조치완료</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p>(7) 도메인 사용개수 축소에 따른 도메인사용료 적정 편성 필요</p>	<p>○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인터넷 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 등의 명칭을 사칭하거나 이를 비방·조롱하는 등 부정확한 목적으로 관련 도메인을 구입·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 및 대통령과 관련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여 관리·운영함.</p> <p>- 2017년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244만원으로 집행률이 34.9%에 불과함.</p> <p>- 이는 당초 예산을 도메인 200개를 1개당 35,000원 수준으로 집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관리하는 도메인 수량을 과거 대비 50% 수준인 106개로 축소하였으며 1개당 평균단가도 23,000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임.</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지속적인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메인 관리수량 및 단가에 따라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p>	<p>주의</p>	<p>○ 19년도 예산은 변경된 수량과 단가에 맞추어 절감 편성함 (17년·18년 각 700만원 → 19년 350만원)</p>	<p>조치완료</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p>(8) 국민청원 게시판의 법적성격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p>	<p>○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 게시판에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견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p> <p>-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하는 청원, 민원, 고충민원 등과 혼동의 소지가 있음.</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기되는 의견의 법적성격이 타 법령상의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p>	<p>제도개선</p>	<p>○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신문고(권익위)와 독립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p> <p>- 청원 제출 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지 않고 제출된 의견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며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하여만 답변하는 등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타 법령에 규정된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으나</p> <p>○ 19년 3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통해,</p> <p>- 타 법령상의 청원, 민원, 고충민원과 더욱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FAQ메뉴를 신설하여</p> <p>- 청와대 국민청원의 이용방법과, 운영원칙을 사례를 제시하여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타 법령상 청원, 민원 등과 혼동되지 않도록 있음</p> <p>- 또한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 고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지하여, 법령상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음</p>	<p>조치완료</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9) 국가안보실의 적정 인력 운용 방안 마련 필요	<p>○ [지적사항] 2017년말 기준 국가안보실의 현원(37명)은 정원(43명)대비 6명이 결원상태이나, 실제로는 다수의 파견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견 인력 규모는 대략 80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바, 정원의 2배에 이르는 파견인력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음.</p> <p>-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확한 기관별 파견 인원 현황에 대해 국가기밀, 보안 등의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 업무 특성상 부득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함.</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국가 안보실의 파견인력 운용현황을 소관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한편, 적정한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p>	제도개선	<p>○ 국가안보실은 국방·외교·안보 분야의 긴급현안 대응 및 국가위기관련 상황관리(24시간 근무체계 구축) 등을 위해 최소한의 파견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p> <p>○ 파견 인력 직무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파견인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p> <p>* 17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의 과정에서 파견인력 운용 현황에 대한 보고 및 설명 실시</p>	조치완료								
(10) 특수활동비 축소 및 내외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	<p>○ [지적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1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124억 8,800만원 중 88억 1,200만원(70.6%)을 집행하였음.</p> <p>- 특수활동비가 불요불급한 용도에 사용되거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특별비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은 감액하고, 기밀성이 부족한 사업은 최소화하거나 투명성이 높은 비목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비의 불투명성과 오용 가능성을 제거할 것</p>	시정	<p>○ 현 정부 출범 시 특수활동비 절감계획(17.5.25)을 마련하여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였음</p> <table border="1" data-bbox="1053 1478 1141 1601"> <tr> <td>'16년</td> <td>'17년</td> <td>'18년</td> <td>'19년</td> </tr> <tr> <td>147억원</td> <td>125억원</td> <td>97억원</td> <td>97억원</td> </tr> </table> <p>특수활동비 예산</p> <p>○ 아울러,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집행내용을 포함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임</p>	'16년	'17년	'18년	'19년	147억원	125억원	97억원	97억원	조치완료
'16년	'17년	'18년	'19년									
147억원	125억원	97억원	97억원									

□ 2018회계연도 (총 4건)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년 6월 말 기준)
<p>(1) 정책연구용역비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p>	<p>○[지적사항]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집행된 정책연구비목(260-02)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정책연구비 집행률이 91.3%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 집행률은 23.7%, 2018년에는 63.0%로 저조하였음</p> <p>○[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정책연구비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계상할 것</p>	<p>제도개선</p>	<p>○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3억원) 대비 1억원 감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음</p> <p>- 전년 대비 20%(60백만원) 감액한 240백만원으로 국회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40백만원 추가 감액됨</p>	<p>조치완료</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년 6월 말 기준)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신속한 공 개 필요	<p>○ [지적사항] 2017년 감사원 재무감사 당시 정책연구보 고서 공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 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2017회계연 도 국회의 결산 심사시 정책연구용역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음</p> <p>- 그러나 2019년도 8월초 기준으로 2018년에 수행된 10건 중 2건만 공개함</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공개 가 능한 정책연구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것</p>	시정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비 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은나라 정책연구시스템(프리즘)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p> <p>- 공개과제 위주로 과제를 선정하고, 용역 완료 이후에는 공개를 독려하는 등 정책연구과제의 공개범위 확대를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p> <p>- 아울러, 2019년에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총 9건 중 법령 상 공개 의무 대상(1천만원 초과)은 5건이며, 이 중 공개 가능한 1개 과제는 2020년 상반기 중 공개 완료하였음</p>	조치 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년 6월 말 기준)
<p>(3)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강구</p>	<p>○ [지적사항] 동 사업은 직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2억 5,600만원 중 1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66.0%) 되고 8,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음</p> <p>-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각종 행사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나, 기관업무의 특성상 향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집행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조 직구성원의 근무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지 원모델 확충 등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을 위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p>제도개선</p>	<p>○ 국정과제 및 국정 현안 연구모임 등 활성화, 전문가 초빙 강연 등 직원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관련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였으며('18년 66% → '19년 98%)</p> <p>- 20년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등 직원 직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임</p>	<p>조치완료</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0년 4월 말 기준)
<p>(4) 사업의 공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p>	<p>○ [지적사항] 정보화추진 사업은 정보시스템 조치 서 비스 요청에 대한 처리실적이라는 단순한 정량지 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음</p> <p>- 서비스 처리실적은 서비스 질(質)과 무관한 단순 산출지표에 해당함</p> <p>○ [시정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정 보화 추진 사업의 공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 도록 성과지표에 내부직원의 정보시스템 이용 만 족도 등 정성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p>제도개선</p>	<p>○ 20년도 성과계획서에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성과지표를 추가하였음</p>	<p>조치 완료</p>

8. 국가 안보실을 포함한 청와대 여론조사 현황 및 연구용역보고서
 9. 청와대 및 각 정부부처 설문조사 발주 현황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여론조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론조사 현황 >

('20.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여론조사 내역	계약금액
2020년 1월~2020년 9월	2020년 국정지표조사 등	1,193

11.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와대 청원 및 답변 주요 내용

- 국민청원이 도입된 2017년 8월 19일부터 현재(2020년 10월 26일) 까지 20만 이상 동의 청원은 총 202건입니다.
- 답변 건수가 많아 목록을 첨부하오니 참조 부탁 드리며, 청원 내용 및 답변 등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1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0-10-05	2020-11-04
2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 상서.	2020-09-21	2020-10-21
3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2020-10-05	2020-11-04
4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20-09-15	2020-10-15
5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2020-09-02	2020-10-02
6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2020-08-28	2020-09-27
7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2020-09-10	2020-10-10
8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2020-08-24	2020-09-23
9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2020-08-28	2020-09-27
10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020-08-31	2020-09-30
11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2020-08-27	2020-09-26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12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2020-08-24	2020-09-23
13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을 청원합니다	2020-08-17	2020-09-16
14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2020-08-20	2020-09-19
15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2020-07-21	2020-08-20
16	'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2020-08-15	2020-09-14
17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	2020-07-20	2020-08-19
18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2020-07-23	2020-08-22
19	추미애장관탄핵	2020-07-14	2020-08-13
20	학교내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2020-07-16	2020-08-15
21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0-07-01	2020-07-31
22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2020-07-10	2020-08-09
23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	2020-07-08	2020-08-07
24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2020-07-06	2020-08-05
25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주세요.	2020-07-03	2020-08-02
26	'저의 딸이 강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충격과 고통으로 딸이 평생 남을 상처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은폐, 조작, 부정행위로 혐의 없다 불기소처분!!TTT	2020-06-11	2020-07-11
27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	2020-06-23	2020-07-23
28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04-24	2020-05-24
29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	2020-04-28	2020-05-28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30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20-05-11	2020-06-10
31	세월호 전면재수사	2020-04-01	2020-05-01
3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2020-04-07	2020-05-07
33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	2020-03-27	2020-04-26
34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시시오.	2020-03-23	2020-04-22
35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2020-04-02	2020-05-02
36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	2020-03-29	2020-04-28
37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2020-03-29	2020-04-28
38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합니다.	2020-03-02	2020-04-01
39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020-03-23	2020-04-22
40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2020-03-27	2020-04-26
41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2020-03-24	2020-04-23
42	저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2020-03-02	2020-04-01
43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	2020-03-25	2020-04-24
44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2020-03-13	2020-04-12
45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찍은 불법촬영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고등학생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2020-03-20	2020-04-19
46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2020-03-20	2020-04-19
47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시시오	2020-03-20	2020-04-19
48	가해자 n번방박사,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2020-03-20	2020-04-19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49	저희 25개월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20-03-20	2020-04-19
50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2020-03-20	2020-04-19
51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020-03-18	2020-04-17
52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	2020-03-12	2020-04-11
53	[국민청원(안)]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2020-02-25	2020-03-26
54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02-11	2020-03-12
55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0-02-27	2020-03-28
56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2020-02-26	2020-03-27
57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02-26	2020-03-27
58	저의 아들이 6년간다닌어린이집 에서 남자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2020-02-07	2020-03-08
59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2020-02-03	2020-03-04
60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2020-02-26	2020-03-27
61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2020-02-04	2020-03-05
62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2020-02-22	2020-03-23
63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2020-01-23	2020-02-22
64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2020-01-02	2020-02-01
65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2020-01-06	2020-02-05
6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 합니다	2019-12-26	2020-01-25
67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02	2020-01-01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68	*** 코리아의***, *** 전 *** 대표, *** 현 ***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2019-11-20	2019-12-20
69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2019-10-29	2019-11-28
70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2019-11-15	2019-12-15
71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11-11	2019-12-11
72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19-10-24	2019-11-23
73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9-10-24	2019-11-23
74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를 요구합니다.	2019-10-24	2019-11-23
75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2019-10-15	2019-11-14
76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2019-10-10	2019-11-09
77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9-10-14	2019-11-13
78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2019-10-21	2019-11-20
79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2019-09-10	2019-10-10
80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2019-09-23	2019-10-23
81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9-08-26	2019-09-25
82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2019-08-28	2019-09-27
83	제주도 카니발 사건	2019-08-16	2019-09-15
84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	2019-08-28	2019-09-27
85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2019-08-05	2019-09-04
86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	2019-07-29	2019-08-28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87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2019-08-12	2019-09-11
88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강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	2019-07-26	2019-08-25
89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2019-08-21	2019-09-20
90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2019-07-16	2019-08-15
91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2019-07-11	2019-08-10
92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2019-07-11	2019-08-10
93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2019-07-08	2019-08-07
94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	2019-06-14	2019-07-14
95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2019-06-07	2019-07-07
96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2019-06-04	2019-07-04
97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2019-05-27	2019-06-26
98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9-05-24	2019-06-23
99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19-05-20	2019-06-19
100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2019-05-03	2019-06-02
101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2019-04-30	2019-05-30
102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2019-04-29	2019-05-29
103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04-24	2019-05-24
104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2019-04-22	2019-05-22
105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2019-04-18	2019-05-18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106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오	2019-04-16	2019-05-16
107	버닝썬 VIP룸 6인을 수사해 주세요	2019-04-11	2019-05-11
108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2019-04-05	2019-05-05
109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2019-04-04	2019-05-04
110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드립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2019-04-01	2019-05-01
111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2019-03-30	2019-04-29
112	대통령님께서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03-29	2019-04-28
113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03-22	2019-04-21
114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	2019-03-14	2019-04-13
115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2019-03-12	2019-04-11
116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2019-03-08	2019-04-07
117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19-02-28	2019-03-30
118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 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 주세요	2019-02-21	2019-03-23
119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2019-02-19	2019-03-21
120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19-02-18	2019-03-20
121	동전택시기사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19-02-15	2019-03-17
122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2019-02-11	2019-03-13
123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2019-01-30	2019-03-01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124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	2019-01-29	2019-02-28
125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2019-01-29	2019-02-28
126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	2019-01-07	2019-02-06
127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2018-12-18	2019-01-17
128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18-12-07	2019-01-06
129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 에게 굶기고 맞아죽은 15개월된 저희딸 애기좀 들어주세요....	2018-12-06	2019-01-05
130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 잠시 튀어나가 옆에있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물리며 죽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개도살을 자행하는 사람들..개도살을 멈추게해주세요	2018-11-27	2018-12-27
131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	2018-11-22	2018-12-22
132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2018-11-19	2018-12-19
133	이수역 폭행사건	2018-11-14	2018-12-14
134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2018-11-09	2018-12-09
135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시시오.	2018-11-09	2018-12-09
136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2018-10-31	2018-11-30
137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딸이 잔인한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10-31	2018-11-30
138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2018-10-24	2018-11-23
139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2018-10-23	2018-11-22
140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2018-10-22	2018-11-21
141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2018-10-20	2018-11-19
142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2018-10-19	2018-11-18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143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2018-10-18	2018-11-17
144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	2018-10-18	2018-11-17
145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2018-10-17	2018-11-16
146	카풀반대	2018-10-16	2018-11-15
147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2018-10-04	2018-11-03
148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2018-10-04	2018-11-03
149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18-10-02	2018-11-01
150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2018-09-19	2018-10-19
151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18-09-06	2018-10-06
152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2018-07-29	2018-08-28
153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2018-07-22	2018-08-21
154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러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2018-07-03	2018-08-02
155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2018-06-26	2018-07-26
156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2018-06-24	2018-07-24
157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를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	2018-06-24	2018-07-24
158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2018-06-17	2018-07-17
159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2018-06-17	2018-07-17
160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2018-06-14	2018-07-14
161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2018-06-13	2018-07-13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162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2018-05-28	2018-06-27
163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2018-05-25	2018-06-24
164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2018-05-25	2018-06-24
165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2018-05-18	2018-06-17
166	합정 **** 불법 누드촬영	2018-05-17	2018-06-16
167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2018-05-13	2018-06-12
168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2018-05-11	2018-06-10
169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8-05-02	2018-06-01
170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2018-04-17	2018-05-17
171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2018-04-16	2018-05-16
172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2018-04-15	2018-05-15
173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2018-04-14	2018-05-14
174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2018-04-06	2018-05-06
175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2018-03-28	2018-04-27
176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2018-03-24	2018-04-23
177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2018-03-23	2018-04-22
178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2018-03-13	2018-04-12
179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2018-03-12	2018-04-11
180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	2018-03-03	2018-04-02
181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2018-02-26	2018-03-28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182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시시오	2018-02-23	2018-03-25
183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2018-02-23	2018-03-25
184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병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2018-02-19	2018-03-21
185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2018-02-17	2018-03-19
186	경제민주화	2018-02-08	2018-03-10
187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2018-02-05	2018-03-07
188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2018-01-25	2018-02-24
189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2018-01-20	2018-02-19
190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2018-01-18	2018-02-17
191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2018-01-15	2018-02-14
192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2018-01-14	2018-02-13
193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2018-01-06	2018-02-05
194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2018-01-03	2018-02-02
195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2017-12-28	2018-01-27
196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2017-12-03	2018-01-02
197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2017-11-24	2017-12-24
198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2017-11-17	2017-12-17
199	조두순 출소반대	2017-09-06	2017-12-05
200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2017-11-04	2017-12-04

구분	제목	시작일	종료일
201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2017-09-03	2017-11-02
20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2017-09-30	2017-10-30

12.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안건 및 결과 보고서

- 대통령비서실 내의 회의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상 도 위 원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

요청하신 사항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1. 2017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2. 2018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3. 2018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4. 2019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2. 최근 3년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감사결과보고서

요청하신 사항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1. 2017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 2018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2019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감사결과 보고서

□ 2020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종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히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감소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20년도 어린이날 행사 방식을 매년 해오던 「청와대 초청방식」에서 「온라인 영상 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한 4월 24일에서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매우 촉박했던 상황에서 일부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임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4.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 요청하신 사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며,

-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 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5. 최근 5년간 연도별 징계 및 비위자 현황, 징계 관련 위원회 소집내역 및 상세 처리결과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 다만,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6.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자녀, 친인척 등 채용 및 근무 현황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 직원 재취업 현황, 재취업 비율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4장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 최근 3년간 연도별 발행간행물 목록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발간간행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목
함께, 보다(도록)
청와대×아티스트 콜라보展 ‘어서 와, 봄’(도록)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 수의계약 건수 및 비율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집행하는 연구용역의 성격상 과제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연구용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용역 현황 >

(*20.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발주건수	예산액	집행액
2017.5월이후	7	65	65
2018	12	340	221
2019	13	340	212
2020.9월말	9	240	71

10.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

- 요청하신 사항은 각 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각각의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현황

-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 현 정부 들어 2020년 10월 6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건 수	소송결과
행정 소송	18건	진행 중
헌법 소송	3건	진행 중
민사 소송	7건	진행 중

12.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국외 출장 및 국외 여비 지급 내역

- 대통령비서실의 국외 출장 관련 사항은 국가안보 및 외교, 통일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3년간 연도별 법인카드 발급현황 및 카드 사용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구매카드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8월말)
4,579	4,987	3,208

- 정부구매카드 관련 세부 자료에는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대통령 내·외빈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식자재 거래 업체 정보 등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채용 및 퇴직 현황

-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주요 직위자를 제외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업무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역 및 사유

- 대통령비서실은 직접 소관하는 법령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6. 2017년~2018년 사업별 간단설명자료

2017~2018년 예산 설명자료를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1. 2017년도 예산 설명자료
2. 2018년도 예산 설명자료

17. 최근 5년간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18. 최근 5년간 연도별 벌금, 과태료, 수수료,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실적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지난 정부 자료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원 위 원

1.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재정(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1-1.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세부내역 및 이월현황 포함)

□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경	이/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잔액
2017	인건비	34,691	34,691	-	34,691	-	33,376	1,315
	기본경비	19,532	19,532	-	19,532	-	16,515	3,017
	업무지원비	19,856	19,856	-	19,856	-	13,870	5,986
	국정운영관리	3,868	3,868	-	3,868	-	2,346	1,522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205	577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245	11
	정보화추진	4,625	4,625	-	4,625	-	4,159	466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53	453	-	453	-	410	43
	합 계	88,063	88,063	-	88,063	-	75,126	12,937
2018	인건비	37,606	37,606	-	37,606	-	36,848	758
	기본경비	18,518	18,518	-	18,518	-	17,256	1,262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16,392	-	16,252	140
	국정운영관리	6,158	6,158	-	6,158	-	5,417	741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510	272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169	87
	정보화추진	5,680	5,680	-	5,680	-	5,298	382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76	476	-	476	-	453	23
	합 계	89,868	89,868	-	89,868	-	86,201	3,667
2019	인건비	40,443	40,443	-	40,443	-	38,379	2,064
	기본경비	19,431	19,431	-	19,431	-	18,920	511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16,392	-	16,317	75
	국정운영관리	4,491	4,491	-	4,491	-	4,096	395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476	306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252	4
	정보화추진	6,378	6,378	-	6,378	-	6,101	277
	국가안보및위기관리	1,496	1,496	-	1,496	-	1,452	44
	합 계	93,669	93,669	-	93,669	-	89,994	3,675
2020 (6월 말)	인건비	42,066	39,604	-	39,604	-	19,745	19,859
	기본경비	20,197	20,147	-	20,147	-	8,546	11,601
	업무지원비	16,392	15,008	-	15,008	-	7,676	7,332
	국정운영관리	4,872	4,572	-	4,572	-	1,059	3,513
	시설관리및개선	6,593	6,593	-	6,593	-	1,717	4,876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36	220
	정보화추진	8,170	8,170	-	8,170	-	2,307	5,863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77	477	-	477	-	176	301
	합 계	99,023	94,827	-	94,827	-	41,262	53,565

※ 2016년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1-2. 예산전용 및 이용현황, 인건비 판공비 전용현황

□ 연도별 전용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용 및 인건비·판공비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관련 공문에는 국가안전보장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용 증		전용 감		전용 사유		
	세부사업-세목	금액	세부사업-세목	금액			
2017	해당사항 없음						
2018	국정평가관리(301) - 일반수용비(210-01)	140	국정평가관리(301) - 일반연구비(260-01)	△140	일반수용비 부족		
	기본경비(200) - 국내여비(220-01)	22	기본경비(200) - 일반수용비(210-01)	△22	국내여비 부족		
	기본경비(200) - 국내여비(220-01)	55	기본경비 (1011-200)	복리후생비 (210-12)	△45	국내여비 부족	
일반용역비 (210-14)				△10			
2019	국가안보및위기관리(600) - 자산취득비(430-01)	361	국가안보및위기관리(600) - 공사비(420-03)	△361	관급 공사로 추진		
	기본경비(200)	국내여비 (220-01)	114	기본경비 (1011-200)	유류비 (210-08)	△130	국내·외 여비 부족
		국외여비 (220-02)	3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4	

※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1-3.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지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1-4.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1-5. 임직원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1-5-1. 임직원 법인카드 지급현황

1-5-2.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한도 및 사용현황(일시·장소·금액·목적)

1-5-3. 임직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현황(사후조치 현황 포함)

1-5-4. 법인카드 포인트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이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 실적

(단위 : 백만원)

2017년(5월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6월말)
3,032	4,414	4,987	2,560

※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자료 작성에서 제외

- 정부구매카드 사용현황 등 세부 자료에는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대통령 내·외빈 초청 행사에 소요되는 식자재 거래 업체 정보 등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구매카드 포인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일괄 관리)

1-6.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손비처리내역과 불납결손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2.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인사 관련 2-1. 임직원 정원/현원 현황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현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17년 12월말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0	15	46	245	154
결 원	△30	-	△3	△19	△8

② 18년 12월말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1	14	46	249	152
결 원	△29	△1	△3	△15	△10

③ 19년 12월말 기준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7	15	48	251	153
결 원	△23	-	△1	△13	△9

④ 20년 7월말 현재

구 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정 원	490	15	49	264	162
현 원	469	15	49	248	157
결 원	△21	-	-	△16	△5

2-2. 임직원 정규직/계약직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임직원 고졸/대졸 등 학력별 현황

- '20년 7월말 기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최종학력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고졸	학사	석사	박사	비고
54명	-	17명	17명	20명	

- 다만,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를 제외한 세부적인 인사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임직원 전체 및 각 직급별 여성/남성 현황

- '20년 7월말 기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성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남성	여성	비고
54명(100%)	46명(85%)	8명(15%)	

- 다만,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를 제외한 세부적인 인사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임직원 직급별 이직 현황(평균 재직기간 기재 要)

- '20년 7월말 기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퇴직(전출, 파견복귀 포함)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자 퇴직(전출, 파견복귀 포함) 현황

<'20. 7월 기준>

연번	직위	직급	성명	비고
1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직(장관급)	임종석	
2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김수현	
3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장하성	
4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한병도	
5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전병헌	
6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영찬	
7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조국	
8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이용선	
9	사회혁신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하승창	
10	인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조현욱	
11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주형철	
12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김현철	
13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이공주	
14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문미옥	
15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정태호	
16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반장식	
17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종원	
18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홍장표	
19	의전비서관	고위외무공무원	박상훈	파견복귀

연번	직위	직급	성명	비고
20	의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종천	
21	제1부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한기	
22	연설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우규	
23	국정기획상황실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윤건영	
24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복기왕	
25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송인배	
26	정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진성준	
27	자치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우영	
28	자치분권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나소열	
29	균형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황태규	
30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구철	
31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유민영	
32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고민정	
33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의겸	
34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수현	
35	해외언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애경	
36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유송화	
37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권혁기	
38	디지털소통센터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정혜승	
39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영배	
40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백원우	
41	반부패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형철	
42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강욱	
43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종호	
44	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형연	
45	시민참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현곤	
46	시민사회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금옥	
47	사회조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강문대	
48	사회혁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성진	
49	제도개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문대림	
50	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봉준	
51	인사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우호	전출
52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권향엽	

연번	직위	직급	성명	비고
53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미숙	
54	재정기획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종규	
55	고용노동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성재	
56	중소벤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주현	
57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도규상	전출
58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차영환	
59	산업통상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성천	전출
60	산업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채희봉	전출
61	국토교통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성원	전출
62	농해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재관	
63	농어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정훈	
64	사회적경제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혁진	
65	사회정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동일	
66	사회정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민형배	
67	교육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광호	
68	교육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홍수	
69	문화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남요원	
70	기후환경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혜애	
71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홍승아	
72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엄규숙	
73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은수미	
74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진규	전출
75	통상비서관	고위외무공무원	이태호	파견복귀

2-6. 국가유공자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별금납부 현황 등)

2-7. 장애인 관련 법(시행령 포함)에 의한 장애인 의무채용 및 준수 현황(별금납부 현황 등)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7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임용·운용 중입니다.

○ 장애인 고용현황

- 의무고용인원 : 17명 / 장애인공무원 : 18명 * 중증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고용현황

- 의무고용인원 : 4명 / 취업지원대상자 등 : 5명

2-8.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청년의무고용제도에 의한 청년고용 및 준수 현황(별금납부 현황 등)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가진 기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2-9.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유관기관으로 이직 현황
(재취업 현황)**

2-9-1. 직급별 퇴직인원

2-9-2. 퇴직 후 재취업 현황

- 퇴직전 : 소속부서, 직급, 성명, 퇴직일자
- 퇴직후 : 재취업기관, 부서, 직급, 직책, 채용일

**2-9-3.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취업
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요청서 제출자 명단
(근무부서, 직급, 퇴임사유, 퇴직일 등)**

**2-9-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확인요청서 및 취업승인
요청서 심사결정자료**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퇴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직원 퇴직 현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 주요직위자 퇴직(전출, 파견복귀 포함) 현황

<’20. 7월 기준>

연번	직위	직급	성명	비고
1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직(장관급)	임종석	
2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김수현	
3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장하성	
4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한병도	
5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전병헌	
6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영찬	
7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조국	
8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이용선	
9	사회혁신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하승창	
10	인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조현옥	
11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주형철	
12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김현철	
13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이공주	
14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문미옥	
15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정태호	
16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반장식	
17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종원	
18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홍장표	
19	의전비서관	고위외무공무원	박상훈	파견복귀
20	의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종천	
21	제1부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한기	
22	연설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우규	
23	국정기획상황실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윤건영	
24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복기왕	
25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송인배	
26	정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진성준	
27	자치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우영	
28	자치분권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나소열	
29	균형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황태규	
30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구철	
31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유민영	
32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고민정	
33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의겸	
34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수현	
35	해외언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애경	
36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유송화	

연번	직위	직급	성명	비고
37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권혁기	
38	디지털소통센터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정혜승	
39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영배	
40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백원우	
41	반부패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형철	
42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강욱	
43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종호	
44	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형연	
45	시민참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현곤	
46	시민사회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금옥	
47	사회조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강문대	
48	사회혁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성진	
49	제도개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문대림	
50	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봉준	
51	인사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우호	전출
52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권향엽	
53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미숙	
54	재정기획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종규	
55	고용노동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성재	
56	중소벤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주현	
57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도규상	전출
58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차영환	
59	산업통상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성천	전출
60	산업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채희봉	전출
61	국토교통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성원	전출
62	농해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재관	
63	농어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정훈	
64	사회적경제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혁진	
65	사회정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동일	
66	사회정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민형배	
67	교육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광호	
68	교육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홍수	
69	문화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남요원	
70	기후환경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혜애	
71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홍승아	
72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엄규숙	
73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은수미	
74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진규	전출
75	통상비서관	고위외무공무원	이태호	파견복귀

2-10. 임직원 보수현황 및 복지혜택 관련

2-10-1 임직원 직급별 평균임금 현황(4대 보험 가입현황, 보험료 지원여부 포함)

□ 소속 직원의 직급별 평균임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급별 평균 임금 현황(2020년도)

(단위 : 원)

직급	평균 임금(매월)	4대보험 가입현황	지원 여부
장관급(실장)	10,970,000	건강보험	자비 50%, 예산 50%
차관급(수석·보좌관·차장)	10,653,750	건강보험	"
고위공무원	8,125,260	건강보험	"
3급	6,170,578	건강보험	"
4급	5,258,219	건강보험	"
5급	3,766,058	건강보험	"
6급	2,909,199	건강보험	"
7급	2,634,392	건강보험	"
8급	2,283,474	건강보험	"
9급	1,764,625	건강보험	"

※ 평균임금 : 예산편성 단가 기준

2-10-2. 임직원 직급별 성과급 현황

- 부처/연도별/직급별/고용형태별/평가기분별/지급액 등 상세내역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및 인사혁신처 지침 등에 따라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3. 임직원 개인별 판공비 지급액 및 사용내역

-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는 판공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0-4.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선물 (복지혜택차원 또는 노조와의 합의로 인한 지급품 등 모두 포함)

-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직원 생일 시 1인 3만원 상당의 소액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11. 공채, 특채 등 각종 채용현황(채용유형별 분류 要)

2-12. 승진이 아닌 외부 추천(혹은 임명)을 통해 취임한 임원의
직책, 대표 경력, 위촉(임명) 일자 및 근거법(령)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서관이상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전·현직 주요직위자 현황

<’20. 7월 기준>

연번	구분	직위	직급	성명	비고
1	현직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직(장관급)	노영민	
2	전직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직(장관급)	임종석	
3	현직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김상조	
4	전직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김수현	前사회수석
5	전직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장하성	
6	현직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강기정	
7	전직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한병도	前정무비서관
8	전직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전병헌	
9	현직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도한	
10	전직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영찬	
11	현직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조원	
12	전직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조국	
13	현직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거성	
14	전직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이용선	
15	전직	사회혁신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하승창	
16	현직	인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외숙	
17	전직	인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조현옥	
18	현직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박복영	
19	전직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주형철	
20	전직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김현철	
21	현직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박수경	
22	전직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이공주	
23	전직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문미옥	
24	현직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황덕순	前일자리기획, 고용노동비서관
25	전직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정태호	前정책기획비서관
26	전직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반장식	
27	현직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이호승	前일자리기획비서관
28	전직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종원	
29	전직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홍장표	
30	현직	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연명	

연번	구분	직위	직급	성명	비고
31	현직	총무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정도	
32	현직	의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탁현민	
33	전직	의전비서관	고위외무공무원	박상훈	
34	전직	의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종천	
35	현직	제1부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지연	前해외언론비서관, 제2부속비서관
36	전직	제1부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한기	前의전비서관
37	현직	제2부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상영	
38	현직	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오종식	
39	전직	연설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우규	前홍보기획비서관
40	현직	연설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동호	
41	현직	국정기록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용우	
42	현직	국정상황실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이진석	前사회정책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43	전직	국정기획상황실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윤건영	
44	현직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광진	
45	전직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복기왕	
46	전직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송인배	前제1부속비서관
47	전직	정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진성준	
48	현직	자치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유대영	
49	전직	자치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우영	前제도개혁비서관
50	전직	자치분권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나소열	
51	전직	균형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황태규	
52	현직	국정홍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여현호	
53	현직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한정우	前춘추관장
54	전직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구철	
55	전직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유민영	
56	현직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강민석	
57	전직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고민정	
58	전직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의겸	
59	전직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수현	
60	현직	해외언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지수	
61	전직	해외언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애경	
62	현직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재준	
63	전직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유송화	前제2부속비서관

연번	구분	직위	직급	성명	비고
64	전직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권혁기	
65	현직	디지털소통센터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강정수	
66	전직	디지털소통센터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정혜승	
67	현직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광철	
68	전직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영배	前정책조정비서관
69	전직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백원우	
70	현직	반부패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명신	
71	전직	반부패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형철	
72	현직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남구	
73	전직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강욱	
74	전직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종호	
75	현직	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영식	
76	전직	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형연	
77	현직	시민참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기현	
78	전직	시민참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현곤	
79	전직	시민사회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금옥	
80	현직	사회통합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경호	
81	전직	사회조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강문대	
82	전직	사회혁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성진	
83	현직	제도개혁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상엽	
84	전직	제도개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문대림	
85	현직	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권용일	
86	전직	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봉준	
87	전직	인사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우호	
88	현직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미경	
89	전직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권향엽	
90	전직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미숙	
91	현직	재정기획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영철	
92	전직	재정기획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종규	
93	현직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준협	
94	현직	고용노동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도재형	
95	전직	고용노동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성재	
96	현직	중소벤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석종훈	
97	전직	중소벤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주현	

연번	구분	직위	직급	성명	비고
98	현직	자영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인태연	
99	현직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억원	
100	전직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도규상	
101	전직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차영환	
102	현직	산업통상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정열	
103	전직	산업통상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성천	
104	전직	산업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채희봉	
105	현직	국토교통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하동수	
106	전직	국토교통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성원	
107	현직	농해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영범	
108	전직	농해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재관	
109	전직	농어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정훈	
110	현직	사회적경제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기태	
111	전직	사회적경제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혁진	
112	현직	사회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류근혁	
113	전직	사회정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동일	
114	전직	사회정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민형배	前자치발전비서관
115	현직	교육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경미	
116	전직	교육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광호	
117	전직	교육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홍수	
118	현직	문화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양현미	
119	전직	문화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남요원	
120	현직	기후환경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제남	
121	전직	기후환경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혜애	
122	현직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유임	
123	전직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홍승아	
124	전직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엄규숙	
125	전직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은수미	
126	현직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여한구	
127	전직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진규	
128	전직	통상비서관	고위외무공무원	이태호	
129	현직	디지털혁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경식	

2-13.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조직의 구성 근거법, 조직원 임기, 임명권자와 최근 3년간 조직구성원의 대표 경력 및 위촉 일자

2-14.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현황

□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통징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라 공무원 징계처분 등을 의결하기 위함

다만, 회의록 등 징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포함한 심의위원회 구성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성

2-15.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개방형직위 채용현황

2-15-1. 채용당시 연도, 임기, 부서명, 직급, 담당업무, 주요 경력, 공무원 퇴직자일 경우 퇴직연월 및 소속 부처명 기재

2-15-2. 현재 개방형직위 현황(부서명, 직급, 담당업무, 직급 공모절차, 채용방법, 담당업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복무 관련

3-1. 기관 내 부정 또는 부적절 비위행위에 대해 적발하거나 감사원을 비롯한 상부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

자체감사결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여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신고사항에 대한 신고현황 및 신고서 사본

3-3. 3-2와 관련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조치 등을 받은 직원 현황 (일시, 소속부서, 직급, 직책, 성명, 징계나 주의조치 사유, 징계 등의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상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에 관하여 신고된 적 없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미신고 등으로 징계나 주의 조치 등을 받은 직원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부강의 등 신고와 초과사례금 신고는 3-10-2. 별도 답변)

3-4.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 10. 22. 현재까지 수사개시 통보 11건, 결과통보 7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5.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당시 소속부서, 징계사유, 징계등급(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미징계 처분자(미징계 사유 포함),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성명기재시 성만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기타 개인정보 삭제시 담당보좌진과 협의 후 삭제 요망), 사후처리 현황, 징계 관련 규정 포함)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 다만, 회의록 등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3-6.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사유, 사후처리 포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3-7. 국외출장 현황 관련

3-7-1. 기관장의 국외출장 내역(대통령 수행도 포함)

- 연도별, 출장국가, 출장기간, 출장목적, 수행인원, 동반인원 및 동반자, 현지 방문기관, 주요 면담자 및 현지 간담회와 회의참석 내역, MOU를 포함해 기관장이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행사에 참석한 내용(서명한 서류 사본), 현재 이행실적과 이행경과내역

3-7-2. 임직원 국외출장 내역(기관장 수행도 포함)

- 연도별, 출장자 성명, 직위, 출장국가, 출장기간, 출장목적, 수행인원, 동반인원 및 동반자, 현지 방문기관, 주요 면담자 및 현지 간담회와 회의내역, 출장보고서, 소요비용(비행기 좌석등급(금액기재 要))등 일체 자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국외출장 관련 사항은 국가안보 및 외교, 통일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교육훈련 관련

3-8-1. 임직원 교육훈련 현황 상세내역

- 석박사 과정, 로스쿨 등 포함, 현재 훈련중인 경우도 포함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육훈련 상세 내역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 임직원의 교육훈련비 환수현황 상세내역

- 각 부처별, 연도별, 인원, 금액, 환수사유 등 상세내역)

3-8-3. 임직원 해외연수 및 교육훈련 현황

- 연도별, 연수대상자 성명, 직위, 연수국가, 연수기간, 연수 목적, 동반인원 및 동반자, 현지 연수기관, 연수결과보고서, 소요비용(비행기 좌석등급(금액기재 要))등 일체 자료)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9.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발생현황

3-9-1. 직장 내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 발생현황

3-9-2. 직장 내 성차별,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한 직장내 이의제기, 고소고발 등 각종 소송제기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9-3.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현황(대상자, 참석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포함)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 관련 비위 예방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17년 5월 이후 총 15회 교육 실시

3-10. 임직원 외부 영리 활동 현황

3-10-1. 근무상황은 연가, 출장, 외출 등으로 구분하고, 사유란에는 출강, 세미나, 토론회,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구분하여 엑셀서식으로 제출

3-10-2. 외부강의 세부현황(강의자명, 강의자 직책(직급), 강의처(기관), 일시, 장소, 강의내용, 강연료, 연간 총 횟수(엑셀파일로 제출)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4.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운영 및 계약 관련

4-1. 내·외부 감사자료

4-1-1. 내·외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사본

4-1-2. 각종 내·외부 감사현황 상세내역

2017년 5월 이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p>(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p>(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p>(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p>(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 2017년 이전 감사원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4-2.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4-2-1. 기관의 명의 계약 현황 및 해약여부 현황과 해약으로 인한 보상·배상 현황(날짜, 내용 기재)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이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 6월말까지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현황 >

(20.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 5월 ~2020년 6월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46,301

4-2.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4-2-2. 전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이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 6월말까지 전체 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

(’20.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업무 내용	총계약금액	경쟁입찰	수의계약금액
2017.5월 ~2020.6월	물품·용역·시설 공사계약	46,301	29,477	16,824

4-2.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4-2-3. 수의계약 체결현황(사업명, 계약기간, 총사업비, 사업개요, 수주처(기관명, 대표자명, 수의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만 제출))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이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 6월말까지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의계약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	비고
2017.5월~2020.6월	16,399	

4-3. 연구용역 발주현황

4-3-1. 전체 연구용역 발주현황(건수, 금액)

4-3-2. 전체 자체 연구 실적 대비 외부 용역연구실적(건수, 금액, 비율 포함)

4-3-3. 자체 연구실적(건수, 금액, 부서명, 책임자명, 주제 기재 要)

4-3-4. 외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주제, 금액, 수주처(기관명, 대표자명, 주제 기재 要))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이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용역 발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 발주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역 내역	계약금액
2017.5.10.~2020.6.30.	정책 연구 용역	666

4.4. 추진사업 현황

4.4.1. 사업별 사업설명서

요청하신 사항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4-4-2.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용, 전용, 이월, 불용현황 및 세부내역 포함)

4-4-3. 사업추진 실적현황

□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실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경	이/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불용
2017	인건비	34,691	34,691	-	34,691	-	33,376	1,315
	기본경비	19,532	19,532	-	19,532	-	16,515	3,017
	업무지원비	19,856	19,856	-	19,856	-	13,870	5,986
	국정운영관리	3,868	3,868	-	3,868	-	2,346	1,522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205	577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245	11
	정보화추진	4,625	4,625	-	4,625	-	4,159	466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53	453	-	453	-	410	43
합 계	88,063	88,063	-	88,063	-	75,126	12,937	
2018	인건비	37,606	37,606	-	37,606	-	36,848	758
	기본경비	18,518	18,518	-	18,518	-	17,256	1,262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16,392	-	16,252	140
	국정운영관리	6,158	6,158	-	6,158	-	5,417	741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510	272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169	87
	정보화추진	5,680	5,680	-	5,680	-	5,298	382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76	476	-	476	-	453	23
합 계	89,868	89,868	-	89,868	-	86,201	3,667	
2019	인건비	40,443	40,443	-	40,443	-	38,379	2,064
	기본경비	19,431	19,431	-	19,431	-	18,920	511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16,392	-	16,317	75
	국정운영관리	4,491	4,491	-	4,491	-	4,096	395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476	306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252	4
	정보화추진	6,378	6,378	-	6,378	-	6,101	277
	국가안보및위기관리	1,496	1,496	-	1,496	-	1,452	44
합 계	93,669	93,669	-	93,669	-	89,994	3,675	
2020 (6월 말)	인건비	42,066	39,604	-	39,604	-	19,745	19,859
	기본경비	20,197	20,147	-	20,147	-	8,546	11,601
	업무지원비	16,392	15,008	-	15,008	-	7,676	7,332
	국정운영관리	4,872	4,572	-	4,572	-	1,059	3,513
	시설관리및개선	6,593	6,593	-	6,593	-	1,717	4,876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36	220
	정보화추진	8,170	8,170	-	8,170	-	2,307	5,863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77	477	-	477	-	176	301
합 계	99,023	94,827	-	94,827	-	41,262	53,565	

※ 2016년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4-4-4. 사업별 정부, 감사원, 국회 등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2017년 5월 이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는 <붙임>과 같고 기타 요청하신 사항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붙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p>(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p>(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p>(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p>(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 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을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히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 2017년 이전 감사원 지적 및 조치 결과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4-4-5. 현재 시행중인 성과평가 지표 및 해설, 2014년부터 현재까지 평가결과

□ 프로그램 성과지표(국정지원-정보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7	'18	'19	'20		
(1) 정보서비스 가용성(정보화) (%)	목표	99.9	99.89	99.90	99.90	가용성(%)= (1-서비스중단시간/ 총 서비스 가용 시 간)*100	정보시스템 장애 처리 대장에서 서비스 중단시간 확인
	실적	99.9	99.90	99.90			

※ 2016년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 단위사업 성과지표(국정지원-정보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성과지표	가 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출처	분야
		구분	'17	'18	'19	'20			
(1) 부서별 서비스 요청에 따른 조치 실적(정보화)(%)	0.5	목표	99.6	99.9	100	100	(서비스 처리건수/ 서비스 요청건수) * 100	서비스 요청 처리대장인	정보화
		실적	100	100	100				
(2) 업무관리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정보화)(%)	0.5	목표		80	83	84	(서비스 만족도 / 서비스 리커트) * 100	업무관리 시스템 사용자 설문조사	정보화
		실적		83.28	84.71				
합계	1.0								

※ 2016년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4-5. 전산장애, 해킹 등의 피해발생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활동 및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PC, 통신 보안체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법률자문 용역 내역(제목, 용역기관, 금액 등 포함) 및 용역결과보고서

- 법률자문 용역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7. 스포츠 회원권 보유 및 지급현황(명의자 기재 요)

- 스포츠 회원권은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8. 차량소유 및 운행현황

4-8-1. 차량 지급 및 운영현황(대수, 차종, 차명, 배기량 포함)

4-8-2. 차량 운영비용(전체 및 차량별, 기사가 있는 경우 인건비 별도 포기 요)

4-8-3. 차량 운행일지 사본

- 2017년 5월 10일 이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총 69대이며, 이중 승용차량은 52대, 승합차량 13대, 화물차량 4대입니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전용차량은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차관급 이상 15명에게 배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 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업무특성상 세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체육대회 등 기관 내 각종 직원행사 추진현황

4-9-1. 행사명, 일자, 예산집행내역(세부내역), 운동복 등 각종 장바상품선물 구입시 계약체결 방법, 금액, 업체명 표기 要

- 청와대는 체육대회와 같은 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4-10.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결과보고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4-11.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부분별, 유형별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4-12. 기관장 주재 기자간담회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13.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타부처와의 MOU 및 협력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4-14.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수발신공문 목록(내용, 날짜, 대외비 여부 등 기재)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20. 6월까지의 수·발신 공문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출범 전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이관)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15.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안전진단 현황(날짜, 내용 기재)

- 보수·보강 현황(날짜, 내용 기재, 안전진단 현황과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작성)

- 대통령비서실 소관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나, 노후 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B등급(양호)’ 평가를 받았으며 지적사항인 옥상방수, 마감재 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16.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과 그 결과

-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 정부 들어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9건	진행 중
헌법소송	3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행정심판	4건	진행 중

**4-17.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서와
수사요청서(고발장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4-18.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
한 자체평가, 서비스 및 정보화 수준 평가, 설문조사, 각종
모니터링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5.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특활비,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현황(집행세부내역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연도별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2020년 (6월말 기준)	6,690	3,156	3,534	8,846	4,560	4,286
2019년	7,194	7,111	83	9,650	9,650	-
2018년	7,194	7,109	85	9,650	9,650	-
2017년	7,194	5,544	1,650	12,488	8,812	3,676

※ 2016년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서,

○ 세부 자료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 정부예산안 내 특활비, 업무추진비 편성 요청 현황
(금액 및 편성사유 기재 포함)**

- 2020년 예산 중 특활비,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2020년 추경으로 특활비 등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본예산	20추경예산 (감액추경 후)
특수활동비	9,650	8,846
업무추진비	7,194	6,690

* 정부예산안과 국회 확정금액은 동일

**7. 201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도별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 통보
요청 공문 수신 현황**

-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의계약 관련 감사원 통보요청 공문 수신 현황은 1회 있습니다.
 - 수의계약 감사원통보대상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⑤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업무추진 현황

8-1. 대통령, 국회 등에 보고된 업무보고서

요청하신 사항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1. 2017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2. 2018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3. 2019년 국정감사 업무보고

8.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업무추진 현황

8-2.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실국별 예산집행 세부내역 포함)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기관 특성상 실·국별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체 현황 자료로 제출합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경	이/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불용
2017	인건비	34,691	34,691	-	34,691	-	33,376	1,315
	기본경비	19,532	19,532	-	19,532	-	16,515	3,017
	업무지원비	19,856	19,856	-	19,856	-	13,870	5,986
	국정운영관리	3,868	3,868	-	3,868	-	2,346	1,522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205	577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245	11
	정보화추진	4,625	4,625	-	4,625	-	4,159	466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53	453	-	453	-	410	43
합 계	88,063	88,063	-	88,063	-	75,126	12,937	
2018	인건비	37,606	37,606	-	37,606	-	36,848	758
	기본경비	18,518	18,518	-	18,518	-	17,256	1,262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16,392	-	16,252	140
	국정운영관리	6,158	6,158	-	6,158	-	5,417	741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510	272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169	87
	정보화추진	5,680	5,680	-	5,680	-	5,298	382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76	476	-	476	-	453	23
합 계	89,868	89,868	-	89,868	-	86,201	3,667	
2019	인건비	40,443	40,443	-	40,443	-	38,379	2,064
	기본경비	19,431	19,431	-	19,431	-	18,920	511
	업무지원비	16,392	16,392	-	16,392	-	16,317	75
	국정운영관리	4,491	4,491	-	4,491	-	4,096	395
	시설관리및개선	4,782	4,782	-	4,782	-	4,476	306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252	4
	정보화추진	6,378	6,378	-	6,378	-	6,101	277
	국가안보및위기관리	1,496	1,496	-	1,496	-	1,452	44
합 계	93,669	93,669	-	93,669	-	89,994	3,675	
2020 (6월 말)	인건비	42,066	39,604	-	39,604	-	19,745	19,859
	기본경비	20,197	20,147	-	20,147	-	8,546	11,601
	업무지원비	16,392	15,008	-	15,008	-	7,676	7,332
	국정운영관리	4,872	4,572	-	4,572	-	1,059	3,513
	시설관리및개선	6,593	6,593	-	6,593	-	1,717	4,876
	행정효율성증진	256	256	-	256	-	36	220
	정보화추진	8,170	8,170	-	8,170	-	2,307	5,863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77	477	-	477	-	176	301
합 계	99,023	94,827	-	94,827	-	41,262	53,565	

※ 2016년 이전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8-3. 각종 조사 실시 현황(실국별, 팀별 조사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직원(외부인사) 채용 현황(자문위원 등 전체 인사 포함)

10.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직원(외부인사) 퇴직 현황(자문위원 등 전체 인사 포함)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4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도별 물품구매 현황

11-1. 연도별 물품구매 현황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이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 6월말까지 물품구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구매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무별 내역	금액
'17.5 ~ '20.6.	보안 및 기계장비 등	16,077

11-2.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11-2-1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규정

-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규정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입니다.

11-2. 장애인 생산품 구매 관련

11-2-2 연도별 물품 구매 계획서

- 연도별 물품 구매 실적 및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및 계획 >

(’20.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계획)
중증장애인 생산품	147	246	204	215

11-3.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11-3-1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11-3.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11-3-2 연도별 물품 구매계획서

연도별 물품 구매 실적 및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계획)
중소기업 제품	12,237	15,219	17,847	18,750

11-4.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

11-4-1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 규정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 규정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11-4. 친환경제품 구매 관련

11-4-2 연도별 물품 구매계획서

(11-4-2) 연도별 물품 구매 실적 및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녹색제품 구매 실적 >

('20.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계획)
녹색제품	279	542	511	552

11-5. 소모성 자재 구매(MRO) 대행업체 관련

※ 소모성자재 구매 대행업체 : 소모성 자재관리로 인한 비용과 인력낭비의 방지를 위해 구매를 대행하는 전문업체

11-5-1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관련 규정

11-5-2 연도별 물품 구매계획서

11-5-3 연도별 물품 구매 리스트

소모성 자재 구매(MRO) 대행업체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2014년~2020년 현재까지 채용현황 관련

12-1. 연도별 채용 현황

* 부처(지청)의 경우, 신규 공무원 총원 인력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연도별 여성, 장애인, 청년 근무 현황

12-2-1 전체 근무 인력 대비 여성, 장애인, 청년 근무 현황

12-2-2 장애인, 청년 근무 인력 리스트 (채용일자, 채용유형, 고용형태,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근무연수, 연봉)

※ 부처(지청)일 경우, 일반 민간근로자 대상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따로 표기)

- 대통령비서실은 위생, 조리, 운전 분야 등에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연도별 고위직 공무원(3급 이상, (관리관: 이사급 이상)) 현황

12-3-1 연도별 전체 고위직 인원 대비 여성 인원·비율

12-3-2 여성 고위직공무원 리스트(채용일자, 채용유형,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 근무연수, 연봉)

-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여성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기준	계(현원)	남	여	비고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	2018. 12.	50(100%)	43(86%)	7(14%)	
	2019. 12.	53(100%)	44(83%)	9(17%)	
	2020. 7.	54(100%)	46(85%)	8(15%)	

- 다만,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를 제외한 세부적인 인사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및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 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
- 14.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신설, 폐지, 통폐합, 일몰(검토의견 포함) 사업 내역 및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15. 재난안전매뉴얼(표준, 실무) 보유 현황

요구하신 사항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연도별 후원 및 기부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정부 사항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작성 제외)

17.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관 관련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 목록

문제 보도 기사 모니터링 목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8.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대외기밀문서 목록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국가기밀, 보안,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특수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용 민 위 원

1. 2017년부터 청와대에서 운영한 TF 목록, 목적, 기간, 위원명, 직책, 주요활동내용

- 대통령비서실은 협업과 소통의 일환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현황에 대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청와대 관련 민원사항, 민원날자, 민원처리결과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별 비위 및 비리 적발 현황 (대상자, 소속부처, 직급, 직책, 적발내용, 처리결과, 징계위 회의 횟수)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현황
(명단, 직책, 직급, 선·퇴임 이유, 주요 이력, 임용기간, 지급된 수당)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구분	성명	기간	비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	'17. 5.22.~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종석	'20. 7. 6.~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의용	'20. 7. 6.~현재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이정동	'19. 1.25.~현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홍석현	'17. 5.22. ~ '17. 6.26.	해촉
대통령 외교(UAE 특임) 특별보좌관	임종석	'19. 1.24. ~ '20. 7. 5.	해촉
대통령 외교(이라크 특임) 특별보좌관	한병도	'19. 1.24. ~ '19.12.15.	해촉
대통령 광화문시대 자문위원	유홍준	'18. 1.23. ~ '19. 1.31.	해촉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탁현민	'19. 2.22. ~ '20. 5.31.	해촉

-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외부강의를 나간 직원 명단, 강의 장소, 강의 일자, 강의 주제, 강의 대상, 강연료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내역

- 요구하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 및 집행 현황(현정부 출범 이후)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2020년(9월말)	9,650	△804	8,846	6,760
2019년	9,650	-	9,650	9,650
2018년	9,650	-	9,650	9,650
2017년(5월이후)	12,488	-	12,488	5,850

7.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직속위원회 목록, 위원장, 주요활동, 활동별 예산 규모, 활동 성과

- 대통령 직속위원회 현황 및 활동성과 등은 각 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급 이상 행정관의 출신지역 분포 현황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소속 직원의 출신지역 현황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9.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위탁 및 용역계약 체결 업체, 업무 내용, 계약 비용, 계약 기간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용역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계약 현황 >

(’20.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 5월 ~2020년 9월	시설물유지관리,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기술용역 등	22,170

10.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선공약 이행결과 및 추진 현황

- 대선공약 이행결과 및 추진현황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대선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는 국정과제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청와대 전산 사고 발생 목록, 사고 내용, 발생일, 발생 사유, 처리결과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정보보안지침에 따라 정보보호 활동 및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PC, 통신 보안체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해외 순방 목록, 방문 국가, 방문 기간 방문 인력 규모, 순방 비용, 순방 성과, 순방에서 교환한 선물

□ 해외 순방 목록, 방문 국가 및 방문 기간

- 미국 방문(‘17.6.28.~7.2.)
- 독일 공식방문 및 G20 정상회의(독일 함부르크) 참석(‘17.7.5.~10.)
-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러시아 방문(‘17.9.6.~7.)
- 제72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7.9.18.~22.)
- 인도네시아 국민방문 및 APEC 정상회의(베트남 다낭), 한-ASEAN/ASEAN+3/EAS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 참석(‘17.11.8.~15.)
- 중국 국민방문(‘17.12.13.~16.)
- 베트남 국민방문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공식방문(‘18.3.22.~28.)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일본 도쿄) 참석(‘18.5.9.)
- 미국 방문(‘18.5.21.~24.)
- 러시아 국민방문(‘18.6.21.~24.)
- 인도·싱가포르 국민방문(‘18.7.8.~13.)
- 제73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8.9.23.~27.)
- 프랑스 국민방문, 이탈리아·교황청 공식방문, 제12차 ASEM 정상회의(벨기에), 제1차 P4G 정상회의(덴마크) 참석 및 덴마크 공식방문(‘18.10.13.~21.)
- 한-ASEAN/ASEAN+3/EAS 정상회의(싱가포르) 및 APEC 정상회의(파푸아 뉴기니 포트모르즈비) 참석(‘18.11.13.~18.)
- 체코 방문, G20 정상회의(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석 및 뉴질랜드 국민방문(‘18.11.27.~12.4.)
-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민방문(‘19.3.10.~16.)
- 미국 방문(‘19.4.10.~12.)
-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민방문(‘19.4.16.~23.)
-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민방문(‘19.6.9.~16.)
- G20 정상회의(일본 오사카) 참석(‘19.6.27.~29.)
- 태국 공식방문, 미얀마·라오스 국민방문(‘19.9.1.~6.)

- 제74차 유엔 총회(미국 뉴욕) 참석('19.9.22.~26.)
- ASEAN+3/EAS 정상회의(태국 방콕) 참석('19.11.3.~5.)
-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중국 청두) 참석('19.12.23.~24.)

□ 방문 인력 규모, 순방 비용 및 선물

○ **(방문 인력 규모)** 대통령 해외 순방 시 청와대 수행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들로 구성되며(대통령 경호처 별도), 구체적인 규모는 방문 기간 및 업무 소요 등을 고려하여 순방별로 결정됩니다.

○ **(순방 비용)**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선물)** 해외 순방에서 교환한 선물 내역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 국가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될 우려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전용기 사용 내역, 이동한 장소, 거리, 발생비용, 대통령 탑승 여부, 탑승 인원수

□ 요구하신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소관사항이므로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소송목록, 소송 당사자, 소송내용, 소송결과, 배상 현황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9건	진행 중
헌법소송	3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1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감사원 감사 자료

- 요구하신 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p>(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p>(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p>(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p>(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감소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20년도 어린이날 행사 방식을 매년 해오던 「청와대 초청방식」에서 「온라인 영상 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한 4월 24일에서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매우 촉박했던 상황에서 일부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임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1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인원, 신설채용, 퇴직 현황, 평균근속년수 및 지급된 임금 규모

- 대통령비서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17. 9. 1일자로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고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인턴직 선발규모, 선발시기, 선발과정, 면접위원 명단, 선발자 명단, 선발자 생년월일(명단은 의원실로 별도제출)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이후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8.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약해지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2017. 9. 1일자로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6명)에 대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9.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국내/외 출장 목록, 출장 인력, 출장에 지급한 비용, 출장 시기, 출장 내용, 출장보고서

- 대통령비서실의 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외교, 통일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국외 연수 목록, 연수 인력, 연수 비용, 연수 시기, 연수 내용, 연수보고서

-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국외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목록,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처, 사용자 직급 및 성명, 불용액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 현황(현 정부 출범 이후)

(단위: 백만원)

2017년도(5월 이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9월말)
3,036	4,579	4,987	3,865

- 정부구매카드 관련 세부 자료에는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대통령 내·외빈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식자재 거래 업체 정보 등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준공 시설물 보수 보강 현황, 시설명, 보강비용, 보강 업체.

- 2017년 5월 10일 이전 연도별 준공 시설물 현황은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관리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17년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연도별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급 이상 직원의 재산신고 내용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재산공개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은 전자관보 사이트 (<http://gwanbo.mois.go.kr>)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훈포장 및 표창 수여 목록, 수여 대상, 수여 사유, 수여 시기, 취소 여부, 취소 시 사유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의 훈장, 포상, 표창 수여 내역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업무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상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검찰, 경찰, 국정원 직원 파견 현황, 파견 이유, 파견 규모, 업무 및 역할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 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대통령 주관 청와대 행사 목록, 행사 목적, 참석자 명단, 행사 비용, 행사 내용

- 대통령의 일정, 국정수행 활동과 연계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국가 행사 보안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행사 준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국격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더하여, 공개가 가능한 일정은 언론과 협의하여 취재 및 보도되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28.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4급 이상 직원 중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자 현황(직급, 직책, 부처, 주 업무 내용)

- 현 정부는 조기대선에 따라 이전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없이 임기가 시작되어 별도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9.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물품 교체내역, 교체 부처, 교체 비용?

- 2017년 5월 10일 이전 물품 취득 현황은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관리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2017년 5월 10일 이후 구입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의 주요물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물품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되므로, 주요물품 취득 전체 현황에 대해 제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물품 취득 현황 >

(’20. 9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품 종	품종별 세부 품목	취득액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잔디청소기, 주유기, 계수기 등	64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측정용 계수기, 누수탐지기, 온·습도측정기 등	42
사무용 기기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소프트웨어 등	6,161
사무용 집기	책상, 의자, 칸막이, 파일서랍, 탁자 등	376
산업기계	터보냉동기, 공기조화기, 냉난방기 등	1,516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차량 및 부속품, 냉장냉동 겸용장치 등	1,000
인쇄사진 및 시청각기기	카메라 및 렌즈, 카메라받침대 등 부속품	1,277
전기·통신기기	방화벽장치, 무선데이터통신장비 등	1,384
기타잡기기	TV, 선풍기, 속기록 비품, 마이크 등	830
계		12,650

※ 주요물품 : 구입단가 50만원 이상 물품

30.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및 처리내역, 비공개시 사유

□ 문재인정부 출범(17.5.10.) 이후 '20. 9월말까지의 정보공개 청구목록 및 처리내역, 비공개 사유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처리 현황>

합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570	272	191	107

<비공개 사유>

법령상 비밀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제5호)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제6호)	영업상 비밀 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4	76	1	6	47	37	17	10

31.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육아휴직직원 수, 휴가기간, 대체 인력 운영 기간, 급여액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17월 5월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모든 인원(6명)에게 휴직 허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11개월이며, 육아휴직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2.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비용,
영상회의 사용실적**

- 대통령비서실은 IT기술 발전에 맞추어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구역으로서 경호구역 내의 PC, 통신 보안체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공무원증 및 출입증 발급량,
회수량, 미회수량, 미회수 사유**

- 요청하신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내역, 구매품목, 구매비용

- 2017. 5월 이전 자료는 전임 정부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이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용역 수행, 물품납품을 나타내는 계약의 구매내역, 구매품목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한 보안 사항에 해당하므로 연도별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용 >

(’20.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매비용			
	’17	’18	’19	’20.9.
중소기업 제품	12,237	15,221	17,847	9,928

35.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6.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 방향을 제시('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 ○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 																				
<p>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p> <p style="text-align: center;">< 정책 연구 추진 현황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th> <th style="width: 45%;">연구과제명</th> <th style="width: 30%;">연구책임자</th> <th style="width: 20%;">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td> <td>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10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td> <td>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10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td> <td>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11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td> <td>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11월</td> </tr> </tbody> </table> <p>○ 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p>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 -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 -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 -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 ○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 나가겠음.
<p>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p>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 <p style="margin-left: 20px;">*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앙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 ** 중앙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56.2%), (19)51.4(+69.5%) ○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앙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
<p>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 ①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③청년농업인 육성, ④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 -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 ○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바우처)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p> <p>○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p>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할 것</p>	<p>○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既 발표</p> <p>*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p> <p>*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p> <p>○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p> <p>-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p> <p>○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p>
<p>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p>○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p> <p>-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p> <p>-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p>
<p>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p> <p>○ 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p>
<p>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정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p>	<p>○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p> <p>○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p>
<p>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p>	<p>○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p> <p>○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p>

37.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의 국내에서의 민생탐방 및 행사 방문 내역, 장소, 시기, 연설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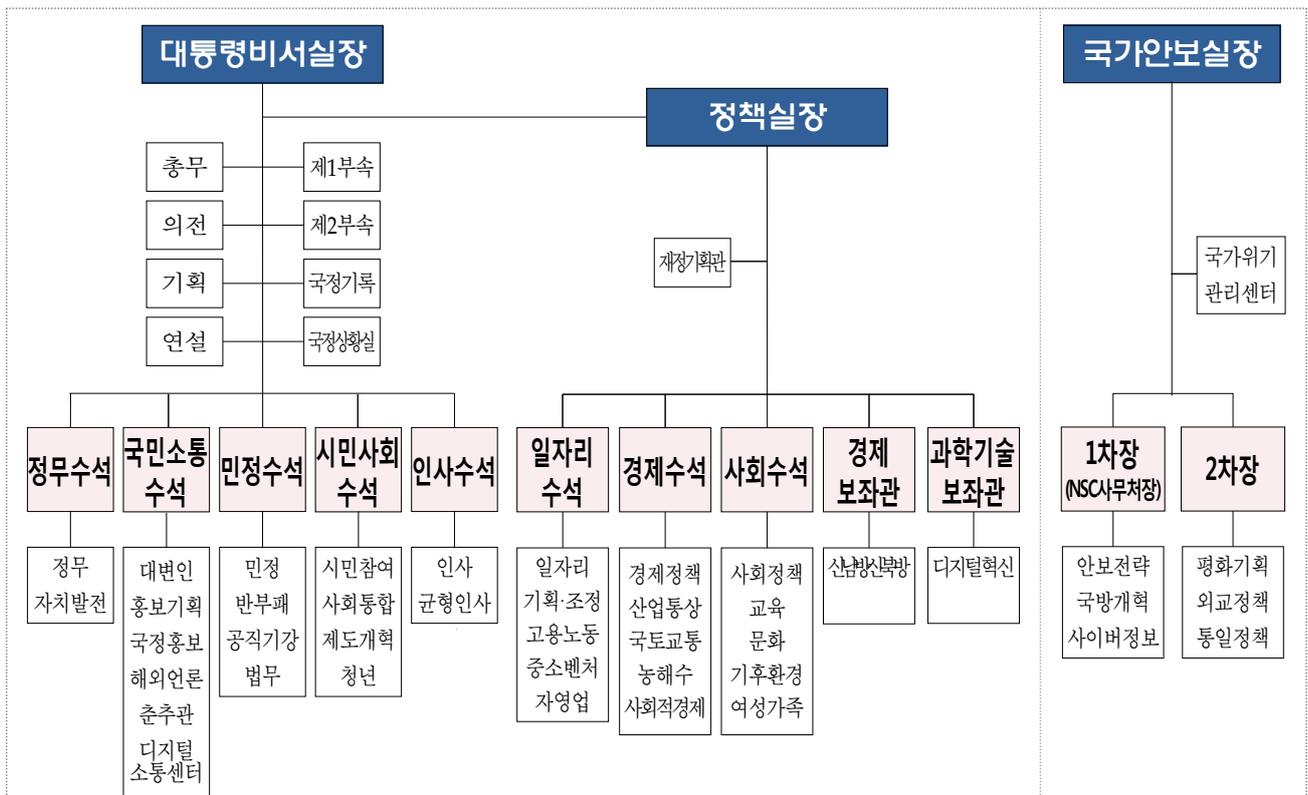
- 대통령의 일정, 국정수행 활동과 연계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및 국가 행사 보안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행사 준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국격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되므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더하여, 공개가 가능한 일정은 언론과 협의하여 취재 및 보도되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김 정 재 위 원

1. 조직도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조직도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아 래 -



2. 현직 각 실장, 각 수석 비서관 및 각 비서관등 간부들의 약력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이상 직위자의 주요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노 영 민	대통령비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駐중국대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 제17,18,19대 국회의원
김 상 조	정책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최 재 성	정무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18,19, 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 민주당 대변인
정 만 호	국민소통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경제부지사 • (주)KT 미디어본부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의전비서관 • 한국경제신문 경제·사회·국제부장
김 종 호	민정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사무총장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감사원 사무총장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김 제 남	시민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 제19대 국회의원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녹색연합 사무처장

성 명	직 위	주요 경력
김 외 숙	인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장 •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황 덕 순	일자리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비서관, 일자리기획비서관 • 고용노동연구원 고용보험평가센터 소장 • 빈부격차및차별시정위원회 비서관 • 고용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실 연구조정실장
이 호 승	경제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IMF(국제통화기금) 선임자문관
윤 창 렬	사회수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박 복 영	경제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정책기획위 국민성장분과 위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美 UC버클리대 객원연구원
박 수 경	과학기술보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 美 하버드대 부속병원 리서치펠로우
서 훈	국가안보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 제3차장 • 국가정보원 대북전략실장
서 주 석	제1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국방부 차관 •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
김 현 종	제2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외교통상부 駐 유엔대표부 대사

3. 청와대 부서별 업무 분장 및 급수별, 성별 근무 인원

□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 및 현원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① 업무분장표

(’20년 10월 현재)

구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 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 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통상, 국토·교통, 농림축산 및 수산업, 해양, 사회적 경제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사회수석실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보좌관실	○ 경제 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 신남방 및 신북방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과학기술보좌관실	○ 과학기술·원자력안전 분야에 관한 업무 ○ 방송통신산업·데이터경제·디지털정부 등 디지털혁신에 관한 업무

② 현원

(’20년 10월 현재)

구분	총계	정무직	비서관	행정관	행정요원
현원	462	15	50	246	151

4. 청와대 현재 과제별 특별보좌관 현황 (각 특별보좌관 약력)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다.

구분	성명	약력	비고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	·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 제16, 17대 국회의원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 · 제17대 국회의원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이정동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한국기업경영학회 회장	

5. 청와대 내 각 부서별 주요 중점 업무

□ 대통령비서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년 10월 현재)

구분	업 무 분 장
정무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정책수용 파악 ○ 국회 및 정당과의 소통·협력 ○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국민소통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 홍보업무 총괄 및 조정 ○ 정례브리핑 및 언론보도 분석·대응에 관한 업무 ○ 출입기자 취재 지원 및 디지털소통센터 운영
민정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반부패·사법 관련 정책 조정 업무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청산
시민사회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청년 등과의 소통·협력 추진 업무 ○ 사회적 갈등의제 관리 및 현안 조정 등에 관한 업무 ○ 민원·제안·제도개선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
인사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및 인사혁신 기획·제도개선 업무 ○ 균형 인사 업무
일자리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확대, 일자리 여건 개선 등 기획·조정 업무 ○ 고용 및 노사관계 관련 업무 ○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자영업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금융정책·공정경쟁업무의 총괄·조정 ○ 산업, 통상, 국토·교통, 농림축산 및 수산업, 해양, 사회적 경제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사회수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여성·청소년·가족 및 보육·저출산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교육 및 문화·체육·관광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 환경·기후변화·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에 관한 업무
경제보좌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 신남방 및 신북방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조정 업무
과학기술보좌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원자력안전 분야에 관한 업무 ○ 방송통신산업·데이터경제·디지털정부 등 디지털혁신에 관한 업무

6.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및 사유

- 대통령비서실은 “법령 등을 직접 소관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청와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파일

- 대통령비서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교육실시, 사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징계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 청와대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기관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등을 위해 총무비서관실 내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고충상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 내 성비위 발생 현황 및 징계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취임 이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결과, 감사결과보고서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붙임과 같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국회운영위 홈페이지(<http://www.steering.na.go.kr.4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①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순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②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p>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p style="margin-left: 20px;">*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p>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p>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거래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거래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p>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p>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既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p>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p>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②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방향을 제시('19.9월) -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 -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 ○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p> <p>< 정책 연구 추진 현황 ></p> <table border="1" data-bbox="740 591 1422 1245"> <thead> <tr> <th data-bbox="740 591 804 633"></th> <th data-bbox="804 591 1107 633">연구과제명</th> <th data-bbox="1107 591 1294 633">연구책임자</th> <th data-bbox="1294 591 1422 633">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40 633 804 815">1</td> <td data-bbox="804 633 1107 815">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td> <td data-bbox="1107 633 1294 815">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4 633 1422 815">3~10월</td> </tr> <tr> <td data-bbox="740 815 804 960">2</td> <td data-bbox="804 815 1107 960">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td> <td data-bbox="1107 815 1294 960">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4 815 1422 960">3~10월</td> </tr> <tr> <td data-bbox="740 960 804 1106">3</td> <td data-bbox="804 960 1107 1106">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td> <td data-bbox="1107 960 1294 1106">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4 960 1422 1106">3~11월</td> </tr> <tr> <td data-bbox="740 1106 804 1245">4</td> <td data-bbox="804 1106 1107 1245">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td> <td data-bbox="1107 1106 1294 1245">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4 1106 1422 1245">3~11월</td> </tr> </tbody> </table> <p>○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p>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증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p>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 -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 ○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 나가겠음.
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앙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 ** 중앙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 (+56.2%), ('19)51.4(+69.5%) ○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앙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가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
<p>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 * ①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국내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 ①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③청년농업인 육성, ④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 -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 ○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 *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바우처)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 ○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p>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既 발표 *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 ○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p>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 -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 -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 -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
<p>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 ○ 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준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p>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

11.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p>(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익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p>(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p>(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p>(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감소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20년도 어린이날 행사 방식을 매년 해오던 「청와대 초청방식」에서 「온라인 영상 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한 4월 24일에서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매우 촉박했던 상황에서 일부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임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12. 취임 이후 자체감사 결과

- 자체감사 결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여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대외비, 비공개 지정절차 및 기준 포함)

-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국가기밀, 보안,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특수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퇴직 현황 (퇴직사유 상세 기재)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퇴직자 현황과 관련,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의 퇴직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직원 퇴직 현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직위	성명	비고
1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2	정책실장	김수현	
3	정책실장	장하성	
4	정무수석비서관	강기정	
5	정무수석비서관	한병도	
6	정무수석비서관	전병헌	
7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도한	
8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윤영찬	
9	민정수석비서관	김조원	
10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11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거성	
12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용선	
13	사회혁신수석비서관	하승창	
14	인사수석비서관	조현욱	
15	경제보좌관	주형철	
16	경제보좌관	김현철	
17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	
18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	
19	일자리수석비서관	정태호	
20	일자리수석비서관	반장식	
21	경제수석비서관	윤종원	
22	경제수석비서관	홍장표	
23	사회수석비서관	김연명	
24	의전비서관	김종천	
25	제1부속비서관	조한기	
26	연설기획비서관	최우규	
27	국정기획상황실장	윤건영	
28	정무비서관	복기왕	
29	정무비서관	송인배	

연번	직위	성명	비고
30	정무기획비서관	진성준	
31	자치발전비서관	김우영	
32	자치분권비서관	나소열	
33	균형발전비서관	황태규	
34	홍보기획비서관	정구철	
35	홍보기획비서관	유민영	
36	대변인	고민정	
37	대변인	김의겸	
38	대변인	박수현	
39	국정홍보비서관	여현호	
40	해외언론비서관	김애경	
41	춘추관장	유송화	
42	춘추관장	권혁기	
43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44	민정비서관	김영배	
45	민정비서관	백원우	
46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47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48	법무비서관	김형연	
49	시민참여비서관	정현곤	
50	시민사회비서관	김금옥	
51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	
52	사회혁신비서관	김성진	
53	제도개선비서관	문대림	
54	인사비서관	권용일	
55	인사비서관	김봉준	
56	균형인사비서관	권향엽	
57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58	재정기획관	박종규	
59	고용노동비서관	조성재	
60	중소벤처비서관	주현	

연번	직위	성명	비고
61	경제정책비서관	차영환	
62	산업통상비서관	강성천	
63	농해수비서관	최재관	
64	농어업비서관	신정훈	
65	사회적경제비서관	최혁진	
66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	
67	사회정책비서관	민형배	
68	교육비서관	이광호	
69	교육비서관	김홍수	
70	문화비서관	남요원	
71	기후환경비서관	김혜애	
72	여성가족비서관	홍승아	
73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	
74	여성가족비서관	은수미	
75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76	제1차장	김유근	
77	제1차장	이상철	
78	제2차장	남관표	
79	제2차장	김기정	
80	평화기획비서관	최종건	
81	통일정책비서관	서호	

**15.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퇴직자 재취업 현황
(퇴직년도, 퇴직후 재취업 날짜, 재취업기관명, 재취업직급 등)**

-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제4장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6. 5급이상 별정직 직원 현황(소속 비서관실별/ 직급/성명/담당
업무/주요경력)**

- 비서관이상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세부적인 직원현황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노영민	○ 디지털소통센터장(별)	강정수
○ 정책실장	김상조	○ 민정비서관(별)	이광철
○ 국가안보실장	서 훈	○ 반부패비서관(별)	이명신
○ 정무수석비서관	최재성	○ 공직기강비서관(별)	이남구
○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만호	○ 법무비서관(별)	김영식
○ 민정수석비서관	김종호	○ 시민참여비서관(별)	이기현
○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제남	○ 사회통합비서관(별)	조경호
○ 인사수석비서관	김외숙	○ 제도개혁비서관(별)	신상엽
○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 청년비서관(별)	김광진
○ 경제수석비서관	이호승	○ 인사비서관(별)	윤지훈
○ 사회수석비서관	윤창렬	○ 균형인사비서관(별)	김미경
○ 경제보좌관	박복영	○ 재정기획관(별)	조영철
○ 과학기술보좌관	박수경	○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박진규
○ 총무비서관	이정도	○ 디지털혁신비서관(별)	조경식
○ 의전비서관(별)	탁현민	○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별)	이준협
○ 제1부속비서관(별)	신지연	○ 고용노동비서관(별)	도재형
○ 제2부속비서관(별)	최상영	○ 중소벤처비서관(별)	석종훈
○ 기획비서관(별)	오종식	○ 자영업비서관(별)	인태연
○ 연설비서관(별)	신동호	○ 경제정책비서관	이억원
○ 국정기록비서관(별)	조용우	○ 산업통상비서관	유정열
○ 국정상황실장(별)	이진석	○ 국토교통비서관	하동수
○ 정무비서관(별)	배재정	○ 농해수비서관(별)	박영범
○ 자치발전비서관(별)	유대영	○ 사회적경제비서관(별)	김기태
○ 대변인(별)	강민석	○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
○ 홍보기획비서관(별)	한정우	○ 교육비서관(별)	박경미
○ 국정홍보비서관(별)	윤재관	○ 문화비서관(별)	양현미
○ 해외언론비서관(별)	이지수	○ 기후환경비서관(별)	박진섭
○ 춘추관장(별)	김재준	○ 여성가족비서관(별)	김유임

17.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주의, 경고 등 처분 현황
 18.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처리 결과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19.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 검찰통보 및 처리현황
 20.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 10. 26 현재까지 수사 개시 통보 11건, 결과 통보 7건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1.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소송 내역 및 결과 일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9건	진행 중
헌법소송	3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22.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현황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3.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신규채용 현황 (해당년도 어느부서 몇 급, 몇 명)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연도별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4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17. 9. 1일자로 전원(6명)에 대하여 정규직전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고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에 따라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연도별 공채 및 특채 채용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임금 현황

(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직급별 연봉, 직원평균급여, 복리후생비, 성과급, 임직원 1인당 성과급, 성과급 총액, 업무추진비)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지침, 기획재정부의 매년도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급여,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급별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급별 평균 임금 현황(2020년도)

(단위 : 원)

직급	평균 임금(매월)
장관급(실장)	10,970,000
차관급(수석·보좌관·차장)	10,653,750
고위공무원	8,125,260
3급	6,170,578
4급	5,258,219
5급	3,766,058
6급	2,909,199
7급	2,634,392
8급	2,283,474
9급	1,764,625

※ 평균임금 : 예산편성 단가 기준

27.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홍보 현황

28.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홍보물 일체

(이미지, 영상물 등 일체/저작권 여부 표시)

□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대통령님의 이미지, 영상물 등의 홍보물 일체를 청와대 홈페이지의 아래 경로(메뉴)에서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내 <청와대 뉴스룸> 하위의 각 메뉴
 - 청와대이야기
 - 영상
 - 카드뉴스

□ 저작권 여부 표시에 대해서는 청와대 홈페이지 하단의 저작권 정책 페이지에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른 저작물 이용 안내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용역 발주현황

- 연도별, 용역과제명, 용역기간, 입찰방식(경쟁/수의 등), 용역비, 용역수행자
- 용역계약체결내용 및 계약서 사본
- 동 기간 용역보고서 공개여부
- 동 기간 용역결과의 인용실적 등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용역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계약 현황 >

(*20.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 5월 ~2020년 9월	시설물유지관리,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기술용역 등	22,170

**30.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람 신청 현황
(관람신청 절차, 연도별 인원, 날짜별 참가단체 및 인원)**

- 청와대 관람 신청은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내국인은 관람희망 20일 전까지, 외국인은 3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연도별 관람 인원은 2017년 177,981명, 2018년 234,953명, 2019년 249,095명, 2020년은 9월말 현재 26,806명이며,

관람객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기준에 따라 모두 파기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발행간행물 목록(정기간행물 포함, 목록만 제출)

-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발간간행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목	비 고
함께, 보다(도록)	
청와대×아티스트 콜라보展 '어서 와, 봄'(도록)	

32.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연도별 직원 국외 출장 및 국외 여비 지급 내역(출장비 지급 관련규정, 출장일자 및 목적, 출장 보고서 제출유무 표시)

- 대통령비서실의 출장과 관련된 자료는 국가안보, 외교, 통일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원활한 국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연도별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강연 일시, 장소, 실제 강연시간 및 강연료 받드시 포함)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소속직원의 직무 외 영리수입현황 - 연도별, 직위/직책, 지급처, 내용(일시, 장소, 시간 포함), 금액 등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겸직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0월 현재, 겸직 중인 공무원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5.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됩니다.
 - 경호 구역 내에서의 공사, 물품납품, 용역 수행 등을 나타내는 계약의 세부내역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 관리 등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부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불필요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전체 규모에 한해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 9월말까지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약 내역	계약금액*
2017년 5월 ~2020년 9월	시설물보수공사, 전산장비 교체, 정보화용역 등	49,963

- 현 정부 출범 이후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6.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사회공헌활동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 - 연도별, 시군구별, 사회공헌활동내용, 지원금액 등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총 44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부 내역은 방문 시설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 관련

- 법인카드 보유현황 및 내역(카드별 사용자표기(부서명포함), 카드별 사용금액)
-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총액 및 유형별 사용현황
- 법인카드 사용내역 (카드번호, 사용자(부서명포함), 사용일시(시간 분 명기), 사용금액, 가맹점명, 업종, 사용목적 및 사유)
- 법인카드 사용 관련 지침 및 사용절차, 조건
- 법인카드 부정사용 적발내역(최근 5년간)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정부구매카드를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구매카드 사용 현황(현 정부 출범 이후)

(단위: 백만원)

2017년도(5월 이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9월말)
3,036	4,579	4,987	3,865

○ 정부구매카드 관련 세부 자료에는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대통령 내·외빈 초청행사에 소요되는 식자재 거래 업체 정보 등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사업별·목별 전용 내역서

□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용 증		전용 감		전용 사유	
	세부사업-세목	금액	세부사업-세목	금액		
2017	해당사항 없음					
2018	국정평가관리(301) - 일반수용비(210-01)	140	국정평가관리(301) - 일반연구비(260-01)	△140	일반수용비 부족	
	기본경비(200) - 국내여비(220-01)	22	기본경비(200) - 일반수용비(210-01)	△22	국내여비 부족	
	기본경비(200) - 국내여비(220-01)	55	기본경비 (1011-200)	복리후생비 (210-12) △45 일반용역비 (210-14) △10	국내여비 부족	
2019	국가안보및위기관리(600) - 자산취득비(430-01)	361	국가안보및위기관리(600) - 공사비(420-03)	△361	관급 공사로 추진	
	기본경비(200)	국내여비 (220-01)	114	기본경비 (1011-200)	유류비 (210-08) △130	국내·외 여비 부족
		국외여비 (220-02)	3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4	

3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사업별·목별 불용내역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		2018		2019	
	불용액	불용사유	불용액	불용사유	불용액	불용사유
합계	4,332	-	3,667	-	3,675	-
인건비	1,315	집행잔액	758	집행잔액	2,064	집행잔액
기본경비	3,017	집행잔액 등	1,262	집행잔액	511	집행잔액
업무지원비	5,986	의도적 절감 등	140	집행잔액	75	집행잔액
국정운영관리	1,522	집행잔액	741	집행잔액, 낙찰차액	395	집행잔액
시설관리 및 개선	577	집행잔액, 낙찰차액	272	집행잔액, 낙찰차액	306	집행잔액, 낙찰차액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11	집행잔액	87	집행잔액	4	집행잔액
정보화추진	466	집행잔액, 낙찰차액	382	집행잔액, 낙찰차액	277	집행잔액, 낙찰차액
국가안보실 운영	43	집행잔액	23	집행잔액	44	집행잔액, 낙찰차액

40.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사업별·목별 이월내역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각 연도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각 부서별,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별 등으로 구분)
42.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제고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자체지침 사본 1부
43. 2018년 이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 사본 1부

□ 현 정부 출범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2020년(9월말)	9,650	△804	8,846	6,760
2019년	9,650	-	9,650	9,650
2018년	9,650	-	9,650	9,650
2017년(5월이후)	12,488	-	12,488	5,850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 집행 세부 내역이 대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집행 증거서류는 위 집행 세부 내역과 연결되는 일련의 집행 과정 중 일부이므로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기관 자체의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 동 지침에는 집행대상, 집행원칙, 집행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 공개 시 대통령 국정수행 활동의 종류, 내용 등 기밀사항이 노출되어 국정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관리를 위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과 「특수활동비 자체집행계획·집행지침」에 따라 월별 집행내용과 유형별 세부집행결과를 포함한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국정수행의 기밀성 등으로 세부지출내역을 바로 공개하지 못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호기간이 지나면 투명하게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제2부속실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

-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금액/구입물품명 및 금액내역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에 제2부속실 소관으로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TF팀 운영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협업과 소통의 일환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현황에 대해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년도별 각 부서별 대통령 지시사항

-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7.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표창 발급 내역

-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포상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원 포상과 관련된 세부 현황은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상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연도별 국민청원 등록, 답변 건수

□ 국민청원이 개설된 2017년 8월 19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전체 청원 915,357건입니다(2020년 9월 30일 기준)

○ 연도별 국민청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차 (2017.8.19.~2018.7.31.)	2년차 (2018.8.1.~2019.7.31.)	3년차 (2019.8.1.~2020.7.31.)
청원수	325,301건	323,987건	229,402건
동의수	38,747,850명	45,641,412명	66,498,988명
방문자수	66,800,213명	110,082,563명	161,481,398명
답변 건수	41건	68건	67건

49. 연도별 가장 참여 인원이 많은 청원 10개, 청원 내용, 참여인원, 답변 내용

□ 2017년 8월 19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각 연차별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 목록을 첨부하오니 참조 부탁 드리며, 청원 내용 및 답변 등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50. 국민청원 비공개 기준

- 비공개 사유는 국민청원 작성요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 작성요건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민청원 작성요건

-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처리 될 수 있습니다.

51.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

-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현황은 각 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 입장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따로 표명할 입장이 없음

53. 2017년 12월 6일 2018년 초에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후 월성1호기 폐쇄 관련 산업부 보고 내용 원본과 대통령 비서실 답변 원본
54. 2018년 3월 15일 산업부가 보고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원본
55. 2018년 4월 2일, 3일, 4일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원본
56. 2018년 5월 23일 경 산업부로부터 보고받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원본
57. 월성 1호기 관련 산업부로부터 보고 받은 파일 일체
58. 월성 1호기 관련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
59.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보고받은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문서 원본일체
60.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보고받은 “에너지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문서 원본일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수석비서관 회의 개최현황

- 취임 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총 112회 개최되었습니다.

62.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NSC 개최현황(NSC 전체회의, 상임위원회 설명 및 개최현황)

- 요구하신 사항은 국가안보실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 요구하신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예산으로 집행된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사용내역 점검

-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금액

- 직원 가족 등의 사망, 결혼, 출산, 생일 등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세부 내역은 개인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구성되어있는 감찰반 관련

- 감찰반장 및 감찰반 구성원 명단 및 원소속기관
- 동 직제규정 제1조 제3호에 따른 감찰업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 친족범위
- 감찰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 총 건수 및 건별 세부 내역

- 대통령비서실 내부 직제 및 업무의 상세 내용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보안 관련 사항과 인사, 조직운영 등 보안 관리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서 주관한 사업의 용역계약 체결 내역

-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목적, 참석자, 예산, 용역업체, 용역계약 종류(수의·입찰 등), 용역계약서 등

- 청와대 행사는 성격상 대통령의 일정, 국정 수행 활동과 연계되므로 공개할 경우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우며
- 더욱이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출입하는 계약업체와 계약의 세부내역 정보는 중요 보안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7. 2019년 3월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68. 2020년 3월, 8월 공개된 청와대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재산공개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은 전자관보 사이트 (<http://gwanbo.mois.go.kr>)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9. 문재인대통령 취임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현황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사용금액 등

- 현 정부 출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2020년(9월말)	7,194	△504	6,690	5,186
2019년	7,194	-	7,194	7,111
2018년	7,194	-	7,194	7,109
2017년(5월이후)	7,194	-	7,194	4,500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추진비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되는 경비로서

- 사용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기별 연 4회(1월·4월·7월·10월)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알려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 자료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문재인대통령 취임 이후 연도별 각 부처별 주요 업무 지시

-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 및 관련 주요 사업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현황 및 관련 주요 사업은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성 준 위 원

1. 북한 관련

1-1. 현재까지 연평도 공동조사에 답하지 않는 등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정책이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우선한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데, 이런 구조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1-2.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

-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수해복구, 내부 정치일정 소화 등으로 남북 및 북미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남북관계보다 북미관계를 우선시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건위기가 극복되는대로 남북협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해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 이를 위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보건의료·재해재난·기후환경 등 분야부터 남북협력을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 북한 친서 관련

- 9.19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2020년 10월까지 북한이 보낸 친서 횟수와 날짜(연, 월)

- 북한 친서와 관련된 자료는 정상간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원 식 위 원

1. 국민청원 개설이후,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청원 이유 및 전체 청원 대비 비공개 비율

- 국민청원이 개설된 2017년 8월 19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전체 청원 915,357건 중 국민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비공개된 청원건수는 146,103건 (16.0%)입니다(2020년 9월 30일 기준).
- 2019년 3월 31일 국민청원 개편으로 사전동의제(청원 작성 후 사전동의 100명을 충족해야 게시되는 제도)가 도입된 후 비공개 청원 비율이 전체 청원 대비 [개편전] 25%에서 [개편후] 0.3%로 변화했습니다.
- 비공개 사유는 국민청원 작성요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 작성요건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민청원 작성요건

-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된 청원은 최초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 '숨김'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 용 빈 위 원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붙임>

①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문기구인 인사지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총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순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②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p>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p>
<p>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p>	<p>○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p>
<p>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p> <p>*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거래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거래말 집필 등 추진</p> <p>○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p>
<p>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p>	<p>○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p> <p>○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p>
<p>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p>	<p>○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p>
<p>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p>○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p>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p>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 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既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li style="padding-left: 20px;">*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p>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②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 방향을 제시('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 ○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p> <p style="text-align: center;">< 정책 연구 추진 현황 ></p> <table border="1" data-bbox="740 622 1422 1272"> <thead> <tr> <th data-bbox="740 622 804 667"></th> <th data-bbox="809 622 1107 667">연구과제명</th> <th data-bbox="1112 622 1294 667">연구책임자</th> <th data-bbox="1299 622 1422 667">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40 667 804 846">1</td> <td data-bbox="809 667 1107 846">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667 1294 846">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667 1422 846">3~10월</td> </tr> <tr> <td data-bbox="740 846 804 987">2</td> <td data-bbox="809 846 1107 987">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td> <td data-bbox="1112 846 1294 987">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846 1422 987">3~10월</td> </tr> <tr> <td data-bbox="740 987 804 1128">3</td> <td data-bbox="809 987 1107 1128">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987 1294 1128">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987 1422 1128">3~11월</td> </tr> <tr> <td data-bbox="740 1128 804 1272">4</td> <td data-bbox="809 1128 1107 1272">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1128 1294 1272">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1128 1422 1272">3~11월</td> </tr> </tbody> </table> <p>○ 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p>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p>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p> <p>-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 -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 ○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 나가겠음.
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앙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 ** 중앙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56.2%), ('19)51.4(+69.5%)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앙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가며,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
<p>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 * ① 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 ① 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 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③ 청년농업인 육성, ④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 -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 ○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바우처)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 ○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p>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既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 *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p>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 -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 -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 -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
<p>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 ○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정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p>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

2.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이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접수 및 처리 현황

- 국민청원 게시판 사용 통계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2017년 8월 19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청원 건수는 총 914,327건입니다.
- 현재까지 게시된 국민청원 중 201건이 20만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며, 191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11건은 청원동의 마감일 또는 답변 마감일이 지나지 않은 답변 대기중 청원입니다.

3.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세부 내역 포함)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4. 보도 해명자료 리스트 및 브리핑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최근 3년간 용역보고서 리스트 및 완료된 경우 보고서 파일

- 최근 3년간('18~'20년) 용역보고서 리스트는 붙임과 같습니다.
공개중인 3건의 보고서를 첨부로 제출드리며, 그 밖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여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제명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분석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시민사회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 방안 연구 방안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대외 외교 경제 주요 현안 관련 조사 연구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인력 적정 규모 산정모델 연구
정부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UN SDGs 추진을 위한 민간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현황 및 방향
교육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
미래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토해 본 평화정제론 발전을 위한 시사점 연구
중.단기 주요 외교안보분야 도전 과제 및 대응 전략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성과와 과제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국가 재난발생시 효율적 자원봉사체계 구축방안 연구
코로나19 위기관리 공공거버넌스 혁신 연구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유형 및 대응방향
코로나 이후 국제 안보질서 변화 전망
동아시아 전략경쟁 평가
2020년 美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향배
한반도 정책 관련 대미정책소통 추진방향
인간안보 개념의 특징과 한반도 적용을 위한 전략

정 점 식 위 원

1. 실국별 업무편람

2. 업무편람, 규정집, 내규집 1부

- 대통령비서실 업무편람 및 내부규정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사항과 인사, 조직운영 등 보안 관리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2021년 예산안 설명자료

- 요청하신 사항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 ① 2017년도 예산 설명자료.
- ② 2018년도 예산 설명자료.
- ③ 2019년도 예산 설명자료.
- ④ 2020년도 예산 설명자료.
- ⑤ 2021년도 예산 설명자료

4. 최근 3년간 이용, 전용, 이월 및 불용된 사업 내역 및 사유

□ 최근 3년간 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용, 이월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용 증액		전용 감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세목	금액	세부사업-세목	금액		
2017년	해당사항 없음					
2018년	국정평가관리(301) 일반수용비(210-01)	140	국정평가관리(301) 일반연구비(260-01)	Δ140	일반수용비 부족	
	기본경비(200) 국내여비(220-01)	22	기본경비(200) 일반수용비(210-01)	Δ22	국내여비 부족	
	기본경비 (1011-200) 국내여비(220-01)	55	기본경비 (1011-200)	복리후생비 (210-12)	Δ45	국내여비 부족
일반용역비 (210-14)				Δ10		
2019년	국가안보밀위기관리 (600) 자산취득비(430-01)		국가안보밀위 기관리 (1130-600)	공사비 (420-03)	361	기본경비 부족
	기본경비 (200)	국내여비 (220-01)	100	기본경비 (1011-200)	유류비 (210-08)	
		국외여비 (220-02)	30			
		국내여비 (220-01)	14	기본경비 (1011-200)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14

□ 최근 3년간 불용된 사업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불용사유
'17년	인건비	34,691	33,376	1,315	집행잔액
	기본경비	19,532	16,515	3,017	집행잔액
	업무지원비	19,856	13,870	5,986	집행잔액
	국정운영관리	3,868	2,346	1,522	의도적 절감
	시설관리및개선	4,782	4,205	577	집행잔액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56	245	11	집행잔액
	정보화추진	4,625	4,159	466	집행잔액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53	410	43	집행잔액
'18년	인건비	37,606	36,848	758	집행잔액
	기본경비	18,518	17,256	1,262	집행잔액
	업무지원비	16,392	16,252	140	집행잔액
	국정운영관리	6,158	5,417	741	집행잔액
	시설관리및개선	4,782	4,510	272	집행잔액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56	169	87	집행잔액
	정보화추진	5,680	5,298	382	집행잔액
	국가안보및위기관리	476	453	23	집행잔액
'19년	인건비	40,443	38,379	2,064	집행잔액
	기본경비	19,431	18,920	511	집행잔액
	업무지원비	16,392	16,317	75	집행잔액
	국정운영관리	4,491	4,096	395	집행잔액
	시설관리및개선	4,782	4,476	306	집행잔액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56	252	4	집행잔액
	정보화추진	6,378	6,101	277	집행잔액
	국가안보및위기관리	1,496	1,452	44	집행잔액

5. 최근 3년간 백서, 연감, 연차보고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2020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2020년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각종 통계집 현황

8. 기관평가결과(자체, 외부)

9. 산하기관 평가 관련 산하기관 자체작성한 평가보고서 중
미흡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점, 인사상 또는 예산상 조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감사자료(17년~20년)

□ 요구하신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별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7년 5월 이후]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8년도 기관운영감사	<p>(1)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방법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장애인복지, 보안 등 수익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 필요 ○ (조치결과) 경쟁입찰 실시 완료(매점: 18년 4월, 카페: 18년 12월)
	<p>(2) 미술품 등급분류 및 관리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가액 「0원」으로 관리 중인 미술품 26점에 대한 실물감정 실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작품가액 반영, 등급 재분류 등 조치 완료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p>(1)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17년 1월~12월까지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용 식수 구입비 계 87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조치결과) 18년도부터 일반수용비 또는 기타운영비에서 이미 집행 중
	<p>(2) 자체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미비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구내매점 집행액(33만원)의 세부 증빙서류 첨부 누락, 평창올림픽 기념 배지 87개(31만원)의 지급대장 기재 누락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서류 관리 방안 부적정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일괄결제 방식의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준 필요 ○ (조치결과) 세부 증빙서류에 대한 중앙관리 등 기준 마련 완료(19년 1월)

구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9년도 재무감사	<p>(1) 청사 입주업체의 공공요금 관련 세입 과소 계상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청사 입주업체에 사후 부과·징수한 공공요금의 경우 부과·징수액 전액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국세청에 납부 ○ (조치결과) 19년도부터 부가가치세 해당액 포함 전액 세입조치 완료
	<p>(2) 지출원인행위 없는 책자 발간 의뢰·납품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국가안보실장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책자 발간을 미리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금 지출 업무 철저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2020년도 기관정기감사	<p>(1) 정책연구용역 공개 등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관계 서류에 비공개 결정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미기재 ○ (조치결과)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관련 절차 철저 이행
	<p>(2)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용역 결과 납품 후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감소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20년도 어린이날 행사 방식을 매년 해오던 「청와대 초청방식」에서 「온라인 영상 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한 4월 24일에서야 최종 확정됨에 따라 매우 촉박했던 상황에서 일부 행정처리가 미흡했던 것임 ○ (조치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실시
	<p>(3) 미술품 전시 등 이력 정보 관리 필요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 작품별 전시 장소·기간 등 이력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조치결과) 미술품 이력 정보 관리 중

11. 2015년~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는 붙임과 같으며, 전 정부 자료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①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총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순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②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p>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 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 때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p>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겨레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p>5. 경제현안점검회의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p>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p>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 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p>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 (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 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 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p> <p>○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p>
<p>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p>	<p>○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p> <p>○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 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 하고 있음</p>
<p>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p>	<p>○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 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p> <p>-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p> <p>○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既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p>
<p>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p>	<p>○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황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li style="padding-left: 20px;">*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p>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②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 방향을 제시('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 ○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p> <p style="text-align: center;">< 정책 연구 추진 현황 ></p> <table border="1" data-bbox="740 622 1422 1272"> <thead> <tr> <th data-bbox="740 622 802 663"></th> <th data-bbox="807 622 1107 663">연구과제명</th> <th data-bbox="1112 622 1294 663">연구책임자</th> <th data-bbox="1299 622 1422 663">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40 669 802 846">1</td> <td data-bbox="807 669 1107 846">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669 1294 846">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669 1422 846">3~10월</td> </tr> <tr> <td data-bbox="740 853 802 992">2</td> <td data-bbox="807 853 1107 992">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td> <td data-bbox="1112 853 1294 992">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853 1422 992">3~10월</td> </tr> <tr> <td data-bbox="740 999 802 1137">3</td> <td data-bbox="807 999 1107 1137">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999 1294 1137">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999 1422 1137">3~11월</td> </tr> <tr> <td data-bbox="740 1144 802 1272">4</td> <td data-bbox="807 1144 1107 1272">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1144 1294 1272">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1144 1422 1272">3~11월</td> </tr> </tbody> </table> <p>○ 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p>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운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p>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p> <p>-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 -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 ○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 나가겠음.
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앙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 ** 중앙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56.2%), ('19)51.4(+69.5%)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앙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가며, -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
<p>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 * ① 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 ① 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 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③ 청년농업인 육성, ④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 -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 ○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바우처)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 ○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p>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既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 *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p>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 -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 -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 -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
<p>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 ○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정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p>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

12.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17년~20년)

요청하신 사항은 의정자료유통시스템을 통하여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13. 언론해명자료 및 정정보도요청내역(17~20년 현재: 보도내용 포함)

요청하신 언론 해명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정정보도요청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반론)보도 청구 세부현황>

구분	언론사명	보도 및 정정보도 요청내용
언론사 요청 (2건)	서울경제	'20.3.9자 「“경제 낙제”라며...투표하면 “興 뿔겠다”」 「수정 필요한 경제정책 1위 소주성 33.5% 2위 공정경제 15.3%」 기사 정정보도
	문화일보	'20.3.30자 「그래프 왜곡하고 가짜 뉴스도...코로나 官權선거 노리나」 사설 정정보도
언중 위 조정 (5건)	중앙일보	'18.4.4자 「'문코드' 압박에 외교안보 박사들 짐싼다」 기사 정정보도
	중앙일보	'19.6.11자 「남정호의 시시각각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칼럼 정정반론보도
	한국방송공사 (KBS)	'19.6.18자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 정정반론보도
	세계일보	'19.10.2자 「檢개혁 외치면서...대검 직제도 틀린 靑」 기사 정정보도
	조선일보	'20.5.18.자 「군장성 삼정검 행사는 왜 돌연 취소됐나」 기사 정정보도

14. 징계 현황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소속 직원 1명을 징계처분 하였습니다.

연도	직급	성명	징계유형	징계사유
2020	운전주사보	○○○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15. 신규채용 및 퇴직현황(17~20년 현재)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인력을 충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서관이상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 전·현직 주요직위자 현황

(’20. 10월 기준)

연번	구분	직위	직급	성명	비고
1	현직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직(장관급)	노영민	
2	전직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직(장관급)	임종석	
3	현직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김상조	
4	전직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김수현	前사회수석
5	전직	정책실장	정무직(장관급)	장하성	
6	현직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장관급)	최재성	
7	전직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강기정	
8	전직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한병도	前정무비서관
9	전직	정무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전병헌	
10	현직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정만호	
11	전직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도한	
12	전직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영찬	
13	현직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종호	前공직기강비서관
14	전직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조원	
15	전직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조국	
16	현직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제남	前기후환경비서관
17	전직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거성	
18	전직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이용선	
19	전직	사회혁신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하승창	
20	현직	인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외숙	
21	전직	인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조현옥	
22	현직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박복영	
23	전직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주형철	
24	전직	경제보좌관	정무직(차관급)	김현철	
25	현직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박수경	
26	전직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이공주	
27	전직	과학기술보좌관	정무직(차관급)	문미옥	
28	현직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황덕순	前일자리기획, 고용노동비서관
29	전직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정태호	前정책기획비서관
30	전직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반장식	
31	현직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이호승	前일자리기획비서관
32	전직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종원	
33	전직	경제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홍장표	
34	현직	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윤창렬	

연번	구분	직위	직급	성명	비고
35	전직	사회수석비서관	정무직(차관급)	김연명	
36	현직	총무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정도	
37	현직	의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탁현민	
38	전직	의전비서관	고위외무공무원	박상훈	
39	전직	의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종천	
40	현직	제1부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지연	前해외언론비서관, 제2부속비서관
41	전직	제1부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한기	前의전비서관
42	현직	제2부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상영	
43	현직	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오종식	
44	전직	연설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우규	前홍보기획비서관
45	현직	연설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동호	
46	현직	국정기록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용우	
47	현직	국정상황실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이진석	前사회정책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48	전직	국정기획상황실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윤건영	
49	현직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배재정	
50	전직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복기왕	
51	전직	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송인배	前제1부속비서관
52	전직	정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진성준	
53	현직	자치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유대영	
54	전직	자치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우영	前제도개혁비서관
55	전직	자치분권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나소열	
56	전직	균형발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황태규	
57	현직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강민석	
58	전직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고민정	
59	전직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의겸	
60	전직	대변인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수현	
61	현직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한정우	前춘추관장
62	전직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구철	
63	전직	홍보기획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유민영	
64	현직	국정홍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윤재관	
65	전직	국정홍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여현호	
66	현직	해외언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지수	
67	전직	해외언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애경	
68	현직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재준	
69	전직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유송화	前제2부속비서관
70	전직	춘추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권혁기	
71	현직	디지털소통센터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강정수	

연번	구분	직위	직급	성명	비고
72	전직	디지털소통센터장	별정직고위공무원	정혜승	
73	현직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광철	
74	전직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영배	前정책조정비서관
75	전직	민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백원우	
76	현직	반부패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명신	
77	전직	반부패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형철	
78	현직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남구	
79	전직	공직기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최강욱	
80	현직	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영식	
81	전직	법무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형연	
82	현직	시민참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기현	
83	전직	시민참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정현곤	
84	전직	시민사회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금옥	
85	현직	사회통합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경호	
86	전직	사회조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강문대	
87	전직	사회혁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성진	
88	현직	제도개혁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상엽	
89	전직	제도개선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문대림	
90	현직	청년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광진	前정무비서관
91	현직	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윤지훈	
92	전직	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권용일	
93	전직	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봉준	
94	전직	인사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우호	
95	현직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김미경	
96	전직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권향엽	
97	전직	균형인사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미숙	
98	현직	재정기획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영철	
99	전직	재정기획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박종규	
100	현직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이준협	
101	현직	고용노동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도재형	
102	전직	고용노동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조성재	
103	현직	중소벤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석종훈	
104	전직	중소벤처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주현	
105	현직	자영업비서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인태연	
106	현직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억원	
107	전직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도규상	
108	전직	경제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차영환	
109	현직	산업통상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정열	
110	전직	산업통상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성천	
111	전직	산업정책비서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채희봉	

연번	구분	직위	직급	성명	비고
112	현직	국토교통비서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동수	
113	전직	국토교통비서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윤성원	
114	현직	농해수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박영범	
115	전직	농해수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최재관	
116	전직	농어업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신정훈	
117	현직	사회적경제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김기태	
118	전직	사회적경제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최혁진	
119	현직	사회정책비서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류근혁	
120	전직	사회정책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정동일	
121	전직	사회정책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민형배	前자치발전비서관
122	현직	교육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박경미	
123	전직	교육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이광호	
124	전직	교육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김홍수	
125	현직	문화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양현미	
126	전직	문화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남요원	
127	현직	기후환경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박진섭	
128	전직	기후환경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김혜애	
129	현직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김유임	
130	전직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홍승아	
131	전직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엄규숙	
132	전직	여성가족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은수미	
133	현직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여한구	
134	전직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진규	
135	전직	통상비서관	고위외무공무원	이태호	
136	현직	디지털혁신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조경식	

16.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 채용전형, 채용 당시 공고, 채용 인원 등

- 대통령비서실은 위생, 조리, 운전 분야 등에 총 47명의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안보,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및 결과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 10. 22. 현재까지 수사개시 통보 11건, 결과통보 7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8. 사업계획 변경된 사업내역, 사유, 계획서(15~20년 현재)

- 해당사항 없습니다.

19. 민원, 진정, 청원 관련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사유별, 총계:
17~20년 현재: 연도별, 총계)

- 대통령비서실 민원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민원 내역을 별도관리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20. 연구용역 현황

□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백만원)
2017	주요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9.0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9.5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9.2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9.2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9.7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재고	9.3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9.3
2018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64.0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18.99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31.2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분석	9.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19.0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9.5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8.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9.0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9.5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9.5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27.1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9.5
2019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9.7
	시민사회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18.6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 방안 연구 방안	29.0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9.75
	대외 외교 경제 주요 현안 관련 조사 연구	28.5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인력 적정 규모 산정모델 연구	9.4
	정부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21.3
	UN SDGs 추진을 위한 민간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현황 및 방향	38.5
	교육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	9.9
	미래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9.5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 본 평화정체론 발전을 위한 시사점 연구	9.4
	중.단기 주요 외교안보분야 도전 과제 및 대응 전략	9.8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성과와 과제	9.5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백만원)
2020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38.8
	국가 재난발생시 효율적 자원봉사체계 구축방안 연구	39
	코로나19 위기관리 공공거버넌스 혁신 연구	25.5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유형 및 대응방향	21.5
	한반도정책 관련 대미정책소통 추진방향	7.9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방향	7.9
	인간안보 개념의 특징과 한반도 적응을 위한 전략	7.7
	코로나이후 국제안보질서 변화 전망	8
	동아시아 전략경쟁 평가	7.9

21.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현황 및 활동 등은 각 위원회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19~'20년 공문 접수 및 발송 목록 현황

- '19년부터 '20. 8월까지의 공문 접수 및 발송 목록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3.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 대통령 지시사항은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 국정과제 관련 (추진계획 및 변경된 내용, 추진실적, 평가결과)

- 국정과제 관련 추진계획 및 변경된 내용,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소관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규제 관련(15년-20년 현재, 연도별, 총계)

-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7. 기관 관련 소송내역 - 승패소율, 사유('15~20년 현재, 연도별, 총계)

- 지난 정부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현재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현 정부 들어 2020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건수	소송결과
행정소송	19건	진행 중
헌법소송	3건	진행 중
민사소송	7건	진행 중

28. 20년 추진 중 주요 정책 현안 자료

- 2020년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및 과제 현황

- 대통령비서실에서는 해당사업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0. 17~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목록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서

31. 17~19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

-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2.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현황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재산공개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은 전자관보 사이트 (<http://gwanbo.mois.go.kr>)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3.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불수용 비율, 불수용 현황('17~'20년 현재)

- 문재인 정부 출범('17.5.10) 이후 '20. 9월말까지의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 현황(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0.9.30 현재>

청구건수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 (이송, 취하, 부존재 등)
5,004	557(100%)	269(48%)	188(34%)	100(18%)	4,447

* 공개율(전부공개+부분공개) : 82%

34. 차량 구입 현황 (17~20년 현재)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은 2017년 이후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교체한 차량은 총 19대입니다.

35.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17~20년 현재)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장애인의 채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0월 현재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임용·운용 중입니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장애인 고용현황
 - 의무고용인원 : 17명(정원의 3.4%) / 장애인공무원 : 18명(3.6%)

37. 대외기밀문서 지정 현황 (17~20년 현재)

-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국가기밀, 보안,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특수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연구용역 현황

-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백만원)
2017	주요국가 대변인 제도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9.0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해결방안 분석	9.5
	2018년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9.2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제고	9.2
	국방개혁 2.0 추진계획 작성 방향과 지침 연구	9.7
	비핵화 평화협정 교환 매트릭스의 유효성 및 가능성 재고	9.3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진화 및 한반도 정책	9.3
2018	소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 방법론 선행 연구	64.0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관리 개선방안	18.99
	평화한국 국가이미지 구축방안 개발	31.2
	주요국 사이버 안보 수행 체계 비교분석	9.5
	한반도 비핵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한 대북 전략	19.0
	전략경쟁 시기로 접어든 미중관계 분석과 전망	9.5
	미래 한미동맹 발전 방향	8.7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상관관계 분석	9.0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수행방안	9.5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혁신 전략	9.5
	남북관계 새 모델 개발	27.1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시 인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국내쟁점사항 사전 연구	9.5

구분	과제명	계약금액(백만원)
2019	여성 자영업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분석	9.7
	시민사회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방향 및 계획	18.6
	공직사회의 자발적인 정부혁신 참여 방안 연구 방안	29.0
	교육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9.75
	대외 외교 경제 주요 현안 관련 조사 연구	28.5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인력 적정 규모 산정모델 연구	9.4
	정부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21.3
	UN SDGs 추진을 위한 민간분야 국내외 교류협력 현황 및 방향	38.5
	교육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분석 연구	9.9
	미래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향	9.5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 본 평화정제론 발전을 위한 시사점 연구	9.4
	중·단기 주요 외교안보분야 도전 과제 및 대응 전략	9.8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전략 성과와 과제	9.5
	2020	다차원적 빈곤접근을 통한 청년 취약계층 발굴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
국가 재난발생시 효율적 자원봉사체계 구축방안 연구		39
코로나19 위기관리 공공거버넌스 혁신 연구		25.5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유형 및 대응방향		21.5
한반도정책 관련 대미정책소통 추진방향		7.9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방향		7.9
인간안보 개념의 특징과 한반도 적응을 위한 전략		7.7
코로나이후 국제안보질서 변화 전망		8
동아시아 전략경쟁 평가		7.9

39. 후원 및 기부 내역(17~20년)

대통령비서실 명의로 후원 및 기부한 내역은 없습니다.

* 대규모 재난(태풍 등), 코로나19, 국군장병 위문 등에 성금을 모아 기탁하고 있습니다.

40. 동호회 활동비 지원 실적(17~20년 현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예산 범위내(연21백만원)에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 기념품, 선물 등 제작 및 배포 현황 (17~20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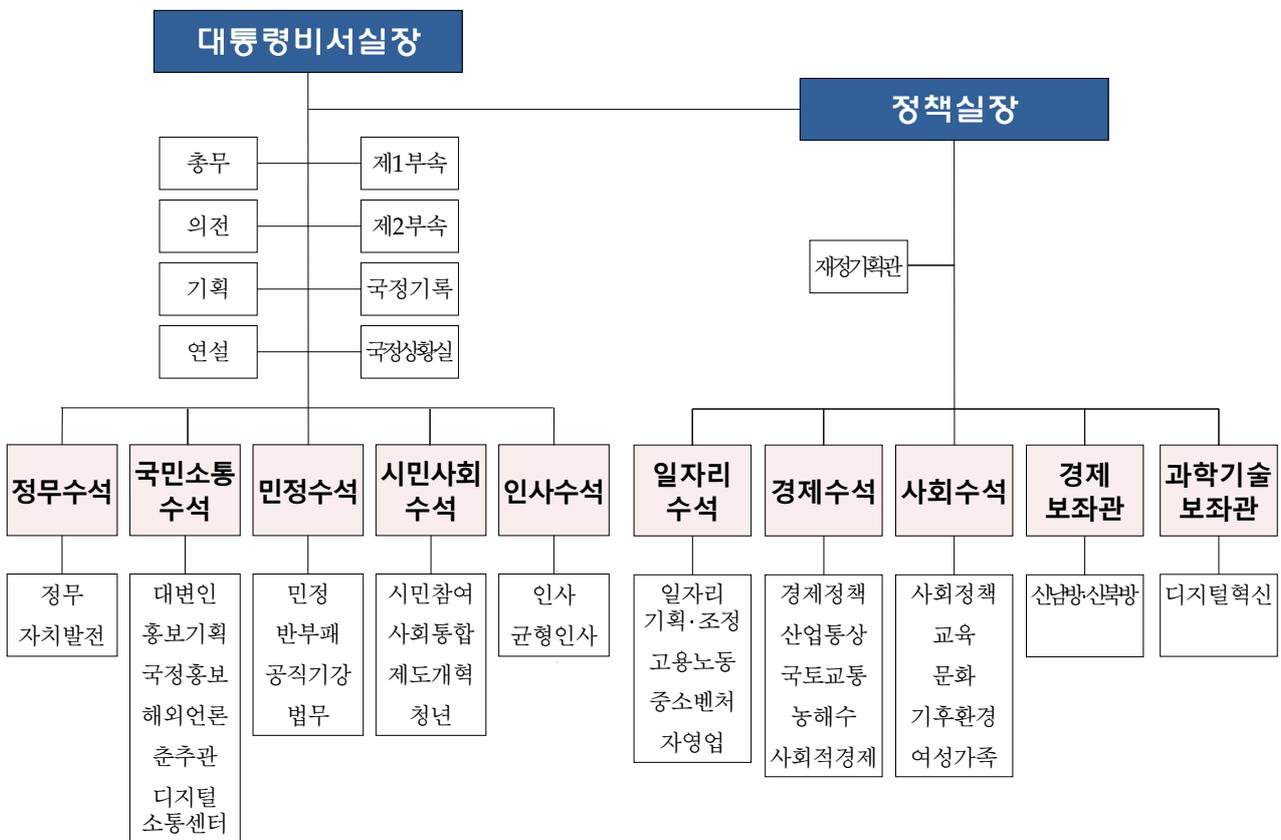
- 대통령비서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기념품으로 머그컵, 카드 지갑 등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및 평가를 통해 선정·제작하였습니다.

- 대통령 기념품은 청와대 관람방문객, 대통령 주재 각종 행사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행사 성격에 맞게 드리고 있으나
 - 성격상 대통령의 일정, 국정 수행 활동과 연계되므로 사용처를 공개할 경우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청와대는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보안 최상위 시설로서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구역에 해당하므로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제작 업체의 정보는 중요 보안 사항이고,
 - 단가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면 선물에 대한 현물적 가치평가가 이뤄져 선물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조직도 및 대표연락처 현황

□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및 대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도)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근거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8수석, 2보좌관으로 구성



- (대표 연락처) 02-730-5800

정 희 용 위 원

1. 문재인 대통령의 2020.3.26. 재산공개 내역 중 ‘문재인 펀드 증가’ 항목의 1억9,166만원 관련 (해명 및 증빙자료, 세부내역 등)

-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과 관련된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재산공개 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은 전자관보 사이트 (<http://gwanbo.mois.go.kr>)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위해 문재인 펀드를 모금하고, 선거 후 모금액을 참여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모금액 상환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계좌에 보관하여 참여자 신청 시 상환하고 있습니다.
 - 2019년 12월 기준 보관계좌의 미상환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1억 9,190만원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 관련

-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후보는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문재인 펀드’를 출시했으나, 2017년8월25일 대통령의 재산공개 관보에는 2013.3.29. 재산공개시와는 다르게, 2017년 출시 문재인펀드 채무액이 한푼도 없는 바 이에 대한 해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문재인 펀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시하여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 모금액을 참여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일시/보고대상자/보고내용 관련 상세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파악하고 있는 청와대 전현직 직원의 연루의혹

5.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청와대 내부직원의 연루의혹 등에 대해 내부감찰을 벌였는지 여부와 내부감찰이 있었다면 감찰결과 보고서 사본

요구하신 자료요구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고

-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확인 또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 관련 자료 등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 되고,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제16조 제1항 단서)

- 6.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횟수 및 출입일자
- 7.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혁진 前 AV자산운용(주) 대표이사의 청와대 출입내역

요구하신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되어 최근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3인(이진아, 한모씨, 정모씨)이 근무한 비서관실명 및 직책

비서관 이상 주요직위자를 제외한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국가기밀, 보안 등을 다루는 대통령비서실의 업무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공무원 총격 피살 관련 21일부터 3일동안 시간대 별 대통령 업무내역 및 내용

□ 9.21(월) 실종자 발생 신고 이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1일부터 3일 동안 대통령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	9.22(화) 18:36	▪ 실종사건 발생 및 북측의 실종자 발견 첩보 관련 서면보고	
2	9.23(수) 08:30	▪ 실종자 피살 관련 첩보내용, 대면보고 - (대통령 지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할 것.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	▪ 긴급 관계장관회의: 9.23(수), 01:00~02:30 ▪ 대북 통지문 발송: 9.23(수), 16:35
3	9.24(목) 09:00	▪ 실종자 피살 관련 분석결과, 대면보고 - (대통령 지시) NSC 상임위를 소집하여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할 것	▪ 관계장관회의: 9.24(목), 08:00 ▪ 국방부 발표: 9.24(목), 11:00
4	9.24(목) 16:11	▪ NSC상임위 결과보고	▪ NSC상임위: 9.24(목), 12:00

- 10. 사전 사건 인지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 11. 공무원 총격 피살 관련 대통령 최초 보고 시점 및 입장
- 12. 23일 새벽에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 정부는 ‘북측의 실종자 사살 등 관련 첩보’ 인지 후, 새벽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9.23 01~02:30)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준의 첩보’인지 신빙성을 분석하였습니다.
 - 이후 국정원, 국방부의 추가첩보 확인과정을 거쳐 우리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 내용’을 9.23 08:30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하였습니다.
- 보고 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할 것.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먼저 국방부의 ‘초도판단’(실종자 北수역 발견 정황) 발표(9.23 13:30)가 있었으며, 대북 전통문 발송(9.23 16:35), 관계장관회의(9.24 08:00) 등을 거친 후,
 - 이번 사건 관련 ‘분석결과’를 9.24 09:00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9.24 ‘군 입장 발표’(11:00) 및 ‘NSC 상임위 성명 발표’(15:00)를 실시하였습니다.
- 정부의 발표는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북측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조각 첩보를 종합, 재구성하여 정보화하는 시간’을 거친 후 이루어졌습니다.

13. 공무원 총격 피살 관련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연연설에 대한 적절성 판단자료

- 이번 사건과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과는 무관합니다.
 -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시간에는 관련 첩보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었으며, 대통령 연설 영상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9.15일 이미 녹화되어 9.18일(현지시각) 유엔측에 발송되었습니다.

- 14. 22일 오후 6시 36분 대통령이 보고받은 “북측이 실종자 해상에서 발견했다” 첩보 첫 서면보고 내용 및 대통령 입장
- 15. 23일 1시에 열린 안보실장 주재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내용 및 결과보고서
- 16. 미국 및 주요국의 첩보를 입수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던 이유

-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대통령은 서면으로 무궁화 10호 승선원 1명이 해상추락(추정) 실종되었다가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는 첩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 9월 23일 개최된 ‘긴급 관계장관회의’(01:00~02:30)에서는 관계기관이 수집한 조각첩보 등 상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준의 첩보’인지 신빙성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국정원, 국방부에 추가첩보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 미국 등 주요국가와 우리 관련부처·기관은 원활하게 정보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17. 대통령 취임이후 NSC 개최내역, 회의주제, 대통령 참석여부

□ 현 정부 출범 이후 2020. 10. 22.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아래와 같이 13회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일자	안 건
'17.5.14.	北 미사일 발사
'17.6.8.	北 미사일 발사
'17.7.4.	北 미사일 발사
'17.7.29.	北 미사일 발사
'17.9.3.	北 핵실험
'17.9.15.	北 미사일 발사
'17.9.24.	北 주요 동향
'17.11.29.	北 미사일 발사
'18.5.25.	남북관계 현안
'18.6.14.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9.3.4.	2.28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9.4.5. 00:20	강원 고성 산불 상황
'19.4.5. 11:00	강원 고성 산불 상황

18.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령, 수석, 수석실 업무추진비내역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통령, 수석, 수석실 업무추진비 내역 등 청와대 예산·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정부는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는 바,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9.27)를 통해, 열린자세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북측에 요청하였고,
 - 아울러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조 승 래 위 원

1.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회 지적사항 처리 내역

□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 정부의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①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공론화·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정보소통센터(www.eiic.or.kr)’ 구축(18.1, 산업부)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추진 ○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수립’(18.6)하여 에너지전환 정책 점검 등 추진
2. 정치인들의 특사에 신중을 기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심사위원회의 실질화하여 개별 심사를 강화하는 등 헌법, 법률에 따라 신중히 특별사면권 행사를 할 계획임
3.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재정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는 2017년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인사추천위원회 등 정부 인사를 위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점검 보완개선을 위해 인사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2017년 12월부터 자문기구인 인사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중임
4.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정책적 측면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보상 전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3차일자리위원회, 17.10.18) *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관점에서 재설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로드맵을 통해 공공부문 81만개 창출방안도 마련 *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사회서비스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명
5. 청와대 문건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것	○대통령기록물법 소관부처인 행안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관련 규정 개정 시 대통령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6. 세월호 관련 투명한 사실 공개와 2기 특조위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 공개 추진.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사회적 참사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특조위원 임명 절차 진행 중임.
7. 법인세 관련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2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과표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22%→25%),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단계적 축소(80%→70%→60%) 등
8.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법적 권한에 대해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비서실은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구성이나 운영을 지시한바 없고, 다만 구성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점검하였음 ○ 적폐청산을 위한 TF팀 운영 점검 과제는 국정과제로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과정에서 민정수석실로 배분되었음

②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향후 북한의 경제개방을 대비한 남북 협력을 위해 사전 연구조사 추진,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을 검토할 것	○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시 남북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우리 측의 신경제구상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 남북공동연구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 남북간 의견을 모어나갈 계획임. ○ 이와 동시에 정세변화 등을 감안하며 우리측 구상을 지속·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바, 정부부처 협의체(통일부 등 18개 부처참여), 국책연구기관 협의체(한반도 경제포럼)등을 운영중에 있음.
<p>2. 대북문제에 있어서 국내 여론 조성 및 국민들을 설득하고 초당적 협력을 위하여 사전에 설득하도록 노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통일국민협약」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바, 세대·이념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등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겠음. <li style="margin-left: 20px;">* △18.9-11, 사회적 대화 시범 실시(20회, 1,500여명) △통일국민협약 추진 민간기구 구성(18.11) ○ 또한, 국회에 보고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충실성 제고 및 주요 현안 추진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남북경협특위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 확대 등을 위해 통일·외교·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울러 대통령 취임후 안보분야 초당적 협력을 위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 대화를 3차례('17.7.19, '17.9.27,'18.3.7.)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안보 및 한반도 평화 의제에대해 대통령과 정당대표 초청대화 등을 중요 계기시마다 개최하여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회와의 소통 및 초당적 협력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3. 남북공동선언 및 군사합의서 등의 비준 주체와 관련해 기준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와의 협력 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겠음.
4. 남북한의 언어 이질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언어 이질성 극복을 위해 거래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분야 전문가 중심의 거래말큰사전공동편찬위 중심으로 남북 어휘 연구·거래말 집필 등 추진 ○ 상기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언어 연구·활용 등 남북한 언어 동질성 확보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음
5.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된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회의체를 구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연2회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과 경제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음 ○ 경제원로 및 기업인과의 대화 등도 수시로 열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인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음
6.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게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홈페이지 상 관련 통계 및 홍보자료로 게재하였던 카드뉴스에 오류가 있음을 2018.8.6.에 인지하여, 이후 즉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 후 재게시하였으며, 당시 청와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수정 공지한 바 있음
7. 유튜브 등의 가짜뉴스에 정부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광고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글측과 협의('17.11)하여 정부광고 게재방식을 무작위배정방식에서 채널지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8.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옥상옥이 되지 않고 정책자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운영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직속 국정과제위원회는 특정 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소관분야 국정과제의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이나, 주요정책 추진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 * 예시) 포용국가 3대 비전 및 9대 전략 발표(정책기획위),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일자리위), 데이터산업활성화 등 4차산업혁명 핵심과제별 전략(안) 마련(4차산업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마련(자치분권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로드맵 발표(저출산위) 등 ○ 앞으로도 국정과제위원회가 위원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p>9. 청와대 사칭 범죄와 관련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없으며, 향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 ○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매월 1회 신규 전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직원 대상 복무기강 확립교육 시 해당내용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p>10. 중국의 미세먼지 관련 규제 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시 한·중 협력 강화를 통해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보정보 교류 이행방안 체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확대, 고위급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등에 합의한 바 있음 - '19.4월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차원에서도 한중 미세먼지 국제포럼 개최 등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양자외교를 지원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제21차 한·중·일 3국환경장관회의(19.11 예정) 등을 계기로 既합의사항 이행점검 등 한·중 협력 지속 강화할 계획임
<p>11. 대통령전용기 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임대 후에 매입하고 공군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보다 5년 단위 임차가 더 경제적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민항기를 임차하여 운영 중임. - 현 상황에서 다양한(비용, 운영관리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최적의 대안으로 5년단위 임차를 결정하였음. - 임차한 대통령전용기는 공군에 의해 실제 운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칭도 ‘공군 1호기’ ○ 향후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임.
<p>12.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삭제되지 않도록 기능을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 국민청원은 소셜로그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특정 게시물에 대한 숨김이나 삭제 조치에 대해 게시자에게 개별 통보할 기술적 방법은 없음 ○ 다만, 지난 3월31일 청원게시판 개편시 사전동의제를 신설하여 중복이나 부적절한 청원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고, 게시글이 숨김 또는 삭제 처리된 경우 청원인은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② 2019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대통령비서실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과도한 국채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 감당 능력에 대한 검토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기금에 대한 지출구조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정부수입과 지출전망을 고려한 국가채무전망과 채무관리 방향을 제시('19.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통해 장기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계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정부에서는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기금 존치와 자산운용 평가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도에는 67개기금중 22개 기금에 대한 존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2개 기금*의 통합 권고, 9개 기금 14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추진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 향후에도 중장기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 및 관리방향 제시, 기금존치 평가 등을 통해 정부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p>2.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차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중소기업 어려움 완화, 서민경제 안정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조기극복 및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및 3차례의 추경 마련 등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추진중 ○ 향후에도 국내외 경제동향 및 민생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추가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속도감있게 대응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노인일자리 관련 생산적인 일자리 모형을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노동시장 환경, 인구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모형, 사회적 경제 활용 모델, 신노년세대 및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등 생산적 일자리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중</p> <p style="text-align: center;">< 정책 연구 추진 현황 ></p> <table border="1" data-bbox="740 622 1422 1312"> <thead> <tr> <th data-bbox="740 622 804 674"></th> <th data-bbox="809 622 1107 674">연구과제명</th> <th data-bbox="1112 622 1294 674">연구책임자</th> <th data-bbox="1299 622 1422 674">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40 680 804 864">1</td> <td data-bbox="809 680 1107 864">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680 1294 864">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680 1422 864">3~10월</td> </tr> <tr> <td data-bbox="740 871 804 1014">2</td> <td data-bbox="809 871 1107 1014">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td> <td data-bbox="1112 871 1294 1014">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871 1422 1014">3~10월</td> </tr> <tr> <td data-bbox="740 1021 804 1164">3</td> <td data-bbox="809 1021 1107 1164">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1021 1294 1164">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1021 1422 1164">3~11월</td> </tr> <tr> <td data-bbox="740 1171 804 1312">4</td> <td data-bbox="809 1171 1107 1312">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td> <td data-bbox="1112 1171 1294 1312">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td> <td data-bbox="1299 1171 1422 1312">3~11월</td> </tr> </tbody> </table> <p>○ 향후 정책 연구 추진 완료(~11월), 모형 검토 및 반영('21년~) 예정</p>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기간																		
1	복지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박경하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2	농산어촌 맞춤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배재윤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0월																		
3	신노년세대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4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 방안 연구	김수린 박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11월																		
<p>4.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p>○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허용-후규제' 체계로 전환하는 등 국제 수준을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p> <p>- 영국 등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19.1~)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50여건을 승인(예, 도심내 수소충전소, 공유주방·숙박, 승차 공유 플랫폼 택시 사업 등)</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신산업 분야(자율차, 드론,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 미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 -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입법체계로 전환('18.2~, 중앙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 5차례)하여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예,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등) ○ 향후에도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거나 더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해 나가겠음.
5.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므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주시면 후속 임명절차를 진행하겠음
6. 신남방정책에 대응해 키르기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신북방정책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19.4월) 및 총리 2개국** 순방('19.7월)으로 중앙아와의 협력 지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정부간 양자협력채널 등을 통해 순방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점검 중 ○ 신북방지역으로의 수출은 3년 연속 두자리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수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앙아 5개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북방수출액(억불): ('17)94.9(+32.0%), ('18)112.1(+18.1%), ('19)138.0(+23.1%) ** 중앙아5개국 수출액(억불): ('17)19.4(+12.1%), ('18)30.3(+56.2%), ('19)51.4(+69.5%)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앞으로도 양자협력채널, 중앙아 국가 등 고위급이 참석하는 북방포럼 개최 등을 통해 협력 모멘텀을 유지·확대해나가며,</p> <p>-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 보건·의료 협력을 중점 추진할 계획</p>
<p>7.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관련 농업·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 정부는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및 4대 주요과제**를 제시함('19.10.25)</p> <p>* ① 쌀 등 국내 농업 민감분야 최대 보호, ②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시 피해보전대책 마련, ③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p> <p>** ① 농가 소득·경영안정 지원, ② 수요기반 확대 및 수급조절기능 강화, ③ 청년농업인 육성, ④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p> <p>- 대책 추가 보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 민관합동협의체('19.11.7), 실무협의체('19.12.26)</p> <p>○ 농업계 요구 핵심 과제인 농가 소득 안정,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 및 수급조절 강화 관련 '20년 예산 확보</p> <p>* ('20년 예산 증액) 공익직불제 2,000억원(총 2.4조원),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 지원(바우처) 35억원, 채소류 가격 안정 48억원 및 자조금 지원 15억원</p> <p>○ 농업계와 소통하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p>8. 투기적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p>	<p>○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대책* 既 발표</p> <p>* ① '19.12.11.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DLF 대책)</p> <p>* ② '20.4.27.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이를 통해 고위험·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 판매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 위험관리를 위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유동성 리스크 등 투자자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를 보완 <p>○동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1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p>
<p>9.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법적 근거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p>	<p>○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정부의 철학에 기반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차원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참여게시판 성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민청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20년 4월까지 1억 3천여만명의 국민이 참여함 - 국민이 법률상 제한을 벗어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의견수렴 창구임 <p>-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청원법>의 ‘청원’과는 다른 의미임</p>
<p>10.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대통령비서실은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차질없이 진행해왔음 (’18년 : 2회, ’19년 : 2회 실시)</p> <p>○향후에도 장애인과의 소통방법, 장애인 인권관련 법 제도 안내 등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 정비와 현장 정착 등을 위해 경영계, 노동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 대책 마련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 핵심협약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경사노위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8.7월부터 전체 회의 12회, 간사단 회의 3회 개최 등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음 ○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뒤에도 고용부 주관 2차례의 토론회('19.6.18, 7.11), 국제노동정책협의회('19.7.16)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음
<p>12.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오표기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외교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 하에 독도 관련 모니터링 및 오류 발견시 시정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오류의 즉각적인 발견 및 시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음.

2.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지침 등 일체

- 대통령비서실 내부규정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등 안보 관련 사항과 인사, 조직운영 등 보안 관리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 자체감사 결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非公開 자료에 해당하여 제출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5년간 본부의 감사결과보고서

4-1. 산하 단체에 대한 지적사항

4-2. 산하 기관 또는 기관장 대상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 현황

4-3.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기관 및 기관장의 수상 내역

5.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6. 최근 5년간 고유업무와 관련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최근 5년간 손비처리 현황 혹은 불납결손액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8.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중 부처 관련 과제 및 각 과제별 이행 상황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현황은 소관부처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